

연구보고 R497 / 2005. 12.

아세안 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중심

김 경 덕 연구위원
심 재 만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 경 덕 연구위원 연구총괄 및 집필
심 재 만 연구원 자료수집 및 정리

머 리 말

우리나라가 1991~2002년에 아세안에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무상으로 지원한 규모는 전체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의 23%에 달한다. 그 중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에 대한 규모는 ASEAN 지원규모의 49.3%에 이를 정도로 해외협력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혜국이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국제적으로 최빈국에 속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이 큰 이들 3개국의 농업·농촌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내 농업 진출과 해외 농업 개발의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여건 개괄, 인구·거시경제·산업·고용 구조 분석, 인구이동과 도농 간 사회경제지표 비교 분석, 농업생산 여건 분석 및 식량가용성 검토, 경제성장의 특성 및 농업·농촌발전 전략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농업분야 해외협력사업 및 포괄적 지역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실무자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요 약

1991~2002년 동안 아세안(ASEAN)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무상지원 규모는 전체 한국 국제협력단 ODA 규모의 23%에 달한다. 이 중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에 대한 규모는 아세안 지원규모 중 49.3%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협력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ODA의 최대 수혜국이고,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국제적으로 최빈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아세안 국가 중 동남아시아의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농업·농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그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아세안의 농촌·농업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해외농업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경제발전 및 농업·농촌발전의 유형분석과 향후 이들 국가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을 가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의 효과적 해외진출에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가장 협력가능성이 큰 3개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농업·농촌 실태파악과 발전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내 농업 진출 및 해외농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① 3개국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여건 개괄, ② 인구, 거시경제, 산업 및 고용구조 분석, ③ 인구이동과 도농간

사회경제지표 비교 분석, ④ 농업생산여건 분석 및 식량가용성 검토, ⑤ 경제성장의 특성 및 농업·농촌발전전략 분석 등이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관련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 분야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사회적·정치적 현황 개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은 다인종 사회·문화, 사회주의 이행기적 정치·경제 구조,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의존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인구구조, 거시경제구조, 고용구조 등 비교 분석

3개국 모두 연소인구 구조를 갖추고 있어 노령화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층 인구를 인적 자본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성장, 특히 농업생산부문에 해거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물리적 자연환경에 대한 종속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구조 분석에서는 농업부문 고용이 전체 취업인구의 2/3 정도를 설명하고 있어 3개국 모두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3) 도농간 발전격차 비교 및 인구이동 요인 분석

90년대 이후 각국에서 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도시화 결정 요인에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는 것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이었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농촌이탈 및 이농인구에 따른 도시문제 등이 예견된다.

소득수준 및 분배구조를 살펴보면, 각국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도·농간 빈곤 격차 분석에서는 분배불균형 문제가 공간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농업생산여건 및 식량가용성 문제 검토

베트남의 경우 농업생산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생산성 부침이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종작물 중 비식량작물의 생산성이 불안정한 것은 수확후 처리시설 등 농업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농업생산이 시장여건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가용성 분석에서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생산량 변화가 직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미곡수출부진으로 인한 곡물구매력 하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별 농업·농촌 발전전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개국 경제성장의 수렴성 분석에서는 각국이 유사한 경제발전 및 성장 패턴을 보임으로써 3개국간에 전략적 보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본투입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 후발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유사한 따라잡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의 경우, 농업생산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질 좋은 투입물 확보, 자연환경 의존성 극복, 축산업 진흥,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 일촌일품 운동, 사회경제적 하부구조 개선 등이 농업·농촌 발전의 주요 과제로 확인되었다. 라오스의 경우, 향후 15년 동안의 농업부

문 발전전략에서는 식량안보 확보, 4~5%의 연간 성장률 확보, 농업상품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 중심적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토지법 등 토지이용 관련 법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임업 개발을 통한 농산촌 개발, 양식 수산업의 상업화 및 집적화, 농촌지역 금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상습 재난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전략 수립 등이 주요 발전전략으로 파악되었다.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상호 수렴하므로 이들 3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통합적 경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개국은 도시-농촌 발전격차, 농촌 빈곤,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지역의 사회정치적 불안 등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 대외협력 중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역할이 크다. 특히 3개국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농업·농촌 자원과 관련한 제도적·문화적 변동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은 3개국의 체제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y of the Agriculture and the Rural Society in ASEAN: With a Focus on Vietnam, Cambodia, and Lao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capac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and rural areas in Vietnam, Cambodia and Laos. With the expectation about increasing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n the future, population structure, growth contribution ratio by sector, development divide between the urban and the rural, migration and its causes,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ood feasibility problem of the countrie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Related to development strategies, the conditional convergence hypothesis of economic growth was tested with econometric models. In addition, long-term growth trend was estimated as well.

To escape the development trap, to reduce poverty, and to induce the rural development, the role of government was emphasized. In fact, the countries have introduced integrated rur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with the concept of strategic complementary. With respect to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focus was put on Vietnam since it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o enhance the mutual benefit between Korea and the Indochina Peninsula.

Researchers: Kim Kyeong-Duk, Shim Jae-Mahn
E-mail: kdkim@krei.re.kr, jmsh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3. 선행 연구 검토 4
- 4. 연구 범위 및 방법 6
- 5. 주요 연구 내용 7

제2장 국가별 일반 현황 및 비교 분석

- 1. 일반 현황 8
- 2. 인구·거시경제·고용구조 비교 분석 24

제3장 농업·농촌 실태 분석

- 1. 빈곤 및 도농격차 39
- 2. 도농간 인구이동 49
- 3. 농업생산성 56
- 4. 식량가용성 60

제4장 농업·농촌 발전전략 및 협력방향

- 1. 농업·농촌 발전전략 67
- 2. 해외협력 방향 78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한계	85
2. 정책적 시사점: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88
부록 1. 인도차이나 반도 삼국의 약사	92
부록 2. 경제성장 수렴과 추세성장률	103
부록 3. 조정실패와 저발전문제	108
부록 4. 인구, 소비자물가, 농업생산성 지수	111
참고 문헌	114

표 차 례

제2장

표 2-1. 베트남 지역별 연간 토지이용료	23
표 2-2. 총인구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25
표 2-3. 연령구조	25
표 2-4. 비농업 부문 여성취업자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	28
표 2-5. GDP 지출구조 비중	30
표 2-6. 국내 총저축규모 비중	31
표 2-7. 노동 및 고용 현황: 캄보디아	36
표 2-8. 노동 및 고용 현황: 베트남	37

제3장

표 3-1. 하루 PPP 1달러 이하 인구 비율	40
표 3-2. 계층 간 소득분배 및 지니계수	42
표 3-3. 도농 간 상수도 및 공중위생 접근성	44
표 3-4. 부문별 노동생산성	45
표 3-5. 도시화 정도 결정요인 추정결과	54
표 3-6. 농지이용현황	57
표 3-7. 농업생산지수	59

제4장

표 4-1. KOICA 무상지원 실적	80
----------------------------	----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가인구비중 추세	27
그림 2-2. GDP 성장률 추이	29
그림 2-3.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율: 캄보디아	33
그림 2-4.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율: 라오스	34
그림 2-5.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율: 베트남	34
그림 2-6. 산업 부문별 고용비중: 캄보디아	36
그림 2-7. 산업 부문별 고용비중: 베트남	37

제3장

그림 3-1. 빈곤율: 국가별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40
그림 3-2. 불평등도 분포	42
그림 3-3. 베트남의 부문별 일인당 노동생산성지수	47
그림 3-4. 캄보디아의 부문별 일인당 노동생산성지수	48
그림 3-5. 도시화율 추이	49
그림 3-6.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도시화 정도에 미친 영향 ...	52
그림 3-7. 일인당 곡물가용량 변화추세	61
그림 3-8. 일인당 곡물생산량 변화추세	62
그림 3-9. 일인당 곡물순수입량 변화추세	63
그림 3-10. 일인당 곡물저장량 변화추세	63

그림 3-11.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캄보디아	64
그림 3-12.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라오스	65
그림 3-13.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베트남	6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투자규모는 직접투자참여국 중에서 3~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동력 흡수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1위를 지키고 있다.¹

베트남의 경우 1986년 “도이 머이(Doi Moi)” 표방과 함께 해외 자본과 지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선진국의 자본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흡수(catch-up)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내전 및 베트남 통치의 종식 등 정치안정으로 대외 지향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 라오스는 인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의 지리적 관계 속에서 경제발전의 초기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인도차이나 3개국의 경제발전 정도는 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¹ 뿐만 아니라 최근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한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과 함께 한국인의 관광이 급증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캄보디아 외국인관광객 중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고용비중은 크나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경제발전 초기 단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낮은 1인당 GDP 규모와 함께 국민 “기초식량의 가용성(food availability)”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초기 단계에서 성공한 국가라 할 수 있는 베트남은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인구진입이 과다하게 발생함으로써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도시화 문제를 겪고 있다.² 그 결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수확 후처리시스템(post harvesting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해외투자자본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감면, 지대감면 등의 유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의 농촌지역은 도로, 통신,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외국의 민간자본이 직접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블록화가 활발히 논의되는 과정에서 ASEAN으로 표방되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ASEAN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ASEAN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농업 협력을 포함한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비농업 부문은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ASEAN

² 베트남은 지역간 인구이동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교육, 주택,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공급계획 하에 지역간 인구이동은 사전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 결과 베트남 남부의 중심도시 호치민(HCM)시의 경우 2004년 당시 공식적 인구규모는 400만명에 불과하지만 실질인구는 600만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ASEAN 역외 국가에 대한 관세 및 수입 쿼터 등 무역장벽 철폐 등이 주요 의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신발, 섬유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들 3개국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중고)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핸드폰을 비롯한 가전제품 등이다. 이는 한국과 인도차이나 반도국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1991~2002년 동안 우리나라의 ASEAN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무상지원 규모는 전체 KOICA ODA 규모의 23%에 달하고, 그 중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에 대한 규모는 ASEAN 지원규모 중 49.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해외협력에 있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ODA의 최대수혜국이고, 캄보디아, 라오스는 최빈국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ASEAN 국가 중 동남아시아의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라오스의 농업·농촌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대 ASEAN 농촌·농업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해외농업개발의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경제발전 및 농업·농촌발전의 유형분석과 향후 이들 국가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을 가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전략의 수립뿐만 아니라 비농업 부문의 효과적 해외 진출에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점증하는 ASEAN 국가와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농업·농촌 실태 파악과 발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내농업진출 및 해외농업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한-ASEAN FTA 체결에 있어 후발 아세안국가의 농업부문 분석과 향후 ODA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이차적 목적도 지닌다.

3. 선행 연구 검토

ASEAN 지역에 대한 기초 연구와 AFTA 확대에 따른 한국의 대응과 관련한 최근 연구로는 권율·김윤경(2002), 권율·정인교·박인원(2003) 등이 있다. 권율·김윤경(2002)은 ASEAN 주요국의 산업과 교역구조에 대하여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역내 상호 의존관계를 동태적으로 규명하였다. 권율·정인교·박인원(2003)은 ASEAN 경제통합에 따른 파급효과와 동북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ASEAN국의 산업구조분석과 동북아시아와의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농업·농촌에 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ASEAN FTA 체결에 대비하여 ASEAN의 농업부문과 농산물 수

출입현황에 대한 기초 연구(권오복 등 2004), 한-ASEAN FTA 협정체결 후 ASEAN과의 농산물 교역이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기초논의(김한호 2004) 등은 농산물 교역과 관련하여 ASEAN의 농산물 수출가능성 및 우리나라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ASEAN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현황분석과 발전가능성 분석보다는 농산물의 품목별 교역에 중점을 두므로써 이들 국가의 장기적 농산물 수출 공급 가능성(feasibility)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 농업·농촌에 관한 조사연구로는 농업기반공사의 해외농업환경 조사보고서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별 국가의 농업생산 환경과 농업투자 관련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주요 품목에 대한 현황 중심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개별 국가의 농업생산기반 및 유통현황과 특정 품목 및 지역현황 분석에 중점을 두므로써 거시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 부합한 분석과 조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 모색에 한계가 있다.

권율(2004)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 방안을 연구하면서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와 연계한 ODA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수혜국 ODA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각국의 빈곤선 추정 및 빈곤경감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1993)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8개국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의 패턴과 그 원인을 경제·사회·제도 측면에서 규명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은 물리적 자본투하량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정치적·문화

적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구조 및 발전현황분석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의 국별연구(country study) 시리즈가 있고, ADB(1994)는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촌빈곤에 대해 거시적 지표를 이용하여 빈곤원인분석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hung(2000)은 UNESCAP의 베트남 농업개발 컨설팅의 일환으로 베트남 농촌사레지역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실태와 문제점, 개발 여건,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왕인근(1994)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개발전략을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지역에 적용하면서 10개국의 거시경제구조와 각국의 농업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개별 국가에 한정되거나 거시적 분석에 치우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농촌 실태를 비교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농업·농촌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인도차이나 반도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대상으로 거시경제변수, 인구 및 사회발전지표, 농촌인구 및 노동력구조,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농업생산여건 및 주요 농산물의 식량가용성 등을 국가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농업식량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아시아 개발은행(ADB), 유엔개발기구(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2차 자료와 함께 3개 정부의 내부자료를 중심으로 계량분석 및 제표분석을 실시하였다.

5. 주요 연구 내용

이 보고서는 총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산업구조와 경제정책, 그리고 농업·농촌 현황이 개관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의 인구구조, 거시경제구조, 고용구조가 비교 분석된다.

제3장은 농업과 농촌의 격차실태를 빈곤과 소득분배, 도시와 농촌간의 빈곤격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접근성, 농업부문과 비농업부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도·농간 격차의 결과 중의 하나인 도·농간 인구이동을 회귀분석한다. 나아가 각국의 농업생산 여건을 분석한 뒤 소비자의 구매력 측도와 관련하여 식량가용성을 분석한다.

제 4장은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의 검토와 함께 향후 우리나라와의 경험 및 ODA 협력전략을 모색한다. 마지막 제 5장은 이 보고서의 요약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와의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국가별 일반 현황 및 비교 분석

1. 일반 현황

1.1. 캄보디아

1.1.1. 개황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동남부의 북위 10~14°, 동경 103~107° 에 위치하면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열대몬순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 계절 및 지역에 따라 기후가 상이하나 12월부터 익년 5월은 건기, 6월부터 11월은 우기로 구분되는 고온다습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토면적은 181,035km²로 남한의 약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이다. 남북 길이는 450km, 동서 길이 580km, 해안선 길이는 340km이다.

인구규모는 2003년 말 현재 1,380만 명, 인구밀도는 73명/km²로 추계된다. 2000~03년 동안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2.4%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90%가 크메르족이고 소수민족(중국, 베트남, 참족, 고산족)이 나머지를 이루고 있다. 종교는 소승불교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계층 간, 도·농간 소득불균형의 심화로 전체 소득이 소수계층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소비시장은 전체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 프놈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열악한 운송 수단과 취약한 유통구조로 인근 지역으로 상권이 확대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화교가 전체상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해 인종간 갈등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정치제도는 입헌군주국(왕국)으로 국왕이 국가원수이나 의원내각제의 정부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 임기 6년의 상원 61석과 임기 5년의 국회 123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23개 선거구 중 15개 지구는 득표수에 따라 의석배분을 하는 지역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선거구는 다수득표제에 의한 1인만을 선출함으로써 지역의 다양성과 인구비례를 동시에 고려하는 선거구 제도를 택하고 있다. 상원은 1999년 헌법 개정안에 의하여 신설되었는데 40세 이상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제1기(1999~2005)에 한해서는 정당별 의석비례와 국왕의 지명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2003년 말 현재 GDP는 39.5억 달러이고 일인당 GDP는 290달러 수준으로 추계된다. 2003년도의 GDP 성장률은 4.8%이고 물가상승률은 1.2%로 안정되어 있다. 무역수지는 343백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경상수지는 391백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816백만 달러로서 수입규모(CIF 기준) 17.71억 달러의 46.1%에 불과하다.

캄보디아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 26.8%, 서비스업

36.0%, 1차 산업 37.2%이다. 이처럼 제조업의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태국,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로부터 기본적 소비재조차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후진국 소비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일인당 GDP가 290달러 수준에 불과한 세계최빈국 중의 하나로서 구매력이 부족하여 중고제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2004년 캄보디아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무역규범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다.

1.1.2. 경제정책

2004년 7월 출범한 제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는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발표한 데 이어 동 전략의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골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로 우선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는 ‘교역원활화’,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 ‘시장접근 기회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원활한 교역을 추진하기 위해 첫째, 민간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구의 통폐합, 둘째 수출입 화물 운송비용 대폭 감축 및 불필요한 중복거래 비용 축소, 셋째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및 시간 단축과 이를 통해 수출입 과정에 대한 비용 및 소요시간 예측 가능성 부여, 넷째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규범 준수 등을 실천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인프라 확충 및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먼저 불필요한 검사에서 초래되는 시간지연 및 비용해소를 위해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면허발급 및

검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요구 조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 및 통신망, 급수 및 하수, 쓰레기 처리시스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금융기관 이용편의를 위한 금융 정보시스템 구축, 숙련노동자 DB 구축 및 인적 자원 개발·육성을 통한 노동시장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무역진흥 및 시장정보 수집활동 강화, 기업 등록시스템의 전산화, 상품수출 촉진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밀수 방지를 위한 관세 역량 확충, 수출산업지대 설치를 통한 수출 촉진 등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를 위해 제도 및 프로그램을 도입 중에 있다.

이상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선정된 정책 과제의 효율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법령으로 ‘투자환경소위원회’, ‘무역원활화소위원회’, ‘중소기업소위원회’로 구성되는 『민간부문 발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야별 7개 민관합동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 Working Group A : 농업 및 농가공 산업
- Working Group B : 관광
- Working Group C : 제조업 및 중소기업
- Working Group D : 법률, 조세
- Working Group E : 서비스
- Working Group F : 에너지 및 인프라
- Working Group G : 수출가공 및 무역원활화

1.1.3.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2003년 기준 농업부문은 GDP의 37.2%, 총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성장률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내전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미복구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및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의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은 ①관개시설 및 영농기술의 열악, ②전근대적 유통구조, ③주요경작지내 지뢰(약 19억 개)로 요약된다(Kingdom of Cambodia 2002).

농촌지역의 낮은 보건위생 및 교육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97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보건·위생 측면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당시 47%의 인구가 적절한 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1998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도시인구의 49%가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는 데 반해 농촌인구는 8.6%만이 화장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문제는 크메르루즈 통치 때 도입된 집단농체제와 오랜 내전에 따른 토지권 분쟁 속에 빈곤농민층의 토지접근권 제약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농가의 15%가 소유 농지가 없고 이들 중 대부분의 가구주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의 재정립과 분권화를 위해 토지·계획·건설성(MLMUPC;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이 설치되었다. 주요 토지정책은 ①불법적 토지약탈 및 소유권 분쟁 예방, 토지자원에 대한 안정적 투자 기반 조성, 토지자원의 시장재적 이용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소유권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행정, ②사회적 목적으로 국가 소

유의 유희지를 곤궁한 가구에 양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분배, ③토지과용에 따른 재해로부터 농민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1.2. 라오스

1.2.1. 개황

라오스의 공식명칭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s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 PDR)’으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가이다. 국토의 면적은 236,800km²로 한반도 전체의 약 1.1배에 달한다. 지형은 산악지대가 전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다. 메콩강 4,200km 중 1,898km가 라오스 영내를 관류하기 때문에 수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우기(5~9월)와 건기(10~4월)가 뚜렷해 수자원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라오스의 국가 형태는 공화국으로서 1975년 12월 2일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건립되었다. 정부 형태는 임기 5년의 대통령 책임제로서 국회에서 선출된다. 국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로서 만 18세 이상의 남녀의 선거권에 의하여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된다. 정당은 인민혁명당(LPRP: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1당 체제를 띠고 있다. 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행정부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인구규모는 2004년 현재 580만 명으로 추계되고 라오름 족(50%), 라오통 족(30%), 라오송 족(10%) 등 총 47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언어는 태국어와 유사함으로써 태국어와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종교는 소승불교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유아사망률 92(베트남 40, 중국 43, 태국 29), 평균 수명은 59세로 아세안 국가들 중 최하위이며, 동남아 지역 평균보다 14세 낮다. 라오스보다 평균 수명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나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21개국뿐이다. 도시 주민의 35%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의사 1인당 인구 수는 수도 비엔티안 지역이 1,089명이고 전국 평균은 4,200명에 달한다.

2003년 전체 GDP 규모는 20억 달러이고 일인당 GDP는 361 달러 수준으로 추계된다.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5.3%에 달하나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15.7%로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수출 3.3억 달러, 수입 5.4억 달러로 2.1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산업구조는 농업부문이 48.6%, 제조업 25.9%, 서비스산업 25.5%이고 농업부문이 취업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에 라오스 전체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라오스 경제는 외국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국가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 라오스 유·무상 원조 규모는 연간 약 3억 달러로서 라오스 연간 GDP의 약 20%에 해당된다. 농업생산은 최근 들어 커피, 사탕수수 및 연초 등의 상업농작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쌀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있다.

1.2.2. 경제정책

1986년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발표하면서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였다. ‘국영기업의 민영화(국영기

업은 1990년대 초 800개에서 2000년 당시 29개로 축소), ‘은행제도 및 세제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법 제정(1988 제정, 1994 개정)’, ‘외국무역 및 국내 유통의 자유’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1988~97년 동안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비농업 부문의 활성화에 따라 연평균 6.5%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동기간 중 라오스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및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 용자가 성과를 발휘하여 인플레이션 저하, 재정적자의 축소 등 비교적 순조로운 거시경제 운영이 이루어졌다.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촉발된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폐쇄적인 라오스 경제체제는 비록 즉각적인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와 수출 감소 등의 형태로 서서히 나타나서 1998년 중 라오스 ‘깎’화는 미달러화 대비 50%, 태국 바트화 대비 60%의 평가절하와 함께 소비자 물가가 128.4% 상승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는 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외적요인뿐만 아니라 외화보유고 부족, 수입의존 과다 등 1986년 ‘신경제제도’ 도입 후 누적되어왔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라오스 경제는 1998~99년을 고비로 2002년에 접어들어 GDP 5.8% 성장, 소비자물가수준 10.7%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오스 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태국 경제가 현재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라오스 총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작황이 좋을 경우, 라오스 경제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2002년 현재 취업인구의 80%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라오스

는 전체의 62만 가구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 중 49만 가구가 생계형 농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및 동부 산간지역의 이동식 전작 논농업, 메콩강변의 수도작 논농업, 남부 고산지역의 원예농업 등으로 지대에 따라 작부체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최근 들어 커피, 사탕수수 및 연초 등 상업작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커피의 경우 1995년 9천 톤에서 1999년 1만8천 톤으로 연평균 17.3%의 생산량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전 국토 면적의 47%(11백만 헥타르)가 산림인 바 임업은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의 경우 의류 다음으로 라오스 제2위의 수출품이다.

그러나 쌀농업이 전체 농업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주요 작물이며, 그 외에 가축, 어업, 비목재 임산물 등 생계형 농업이 지배적이다. 연평균 농업생산 증가율은 4~5%이고, 1990년대에 쌀 생산은 관개시설 확충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은 같은 기간 50%, 어업은 16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식량 수요는 국내 생산에 의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영농방식 및 불안정한 농산물 시장 등으로 안정된 공급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농촌지역 도로망의 미발달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의 시장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시장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결정에 따른 농업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당시 총 도로 길이 2만4천km 중 포장도로 3.9km, 자갈길 6.9km, 흙길 13.2km이고 나머지는 전근대적인 도로이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교통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 기업 물색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 및 도로 하부구조 미발달은 칼륨, 철, 금, 귀금속, 주석, 석탄 및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

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산지대에서 농지와 임야 간 배분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것 또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식 전작 과정에서 한 지역에서의 영농기간이 짧아지면서 산림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압력 역시 농지와 임야간 배분문제를 야기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3. 베트남

1.3.1. 개황

베트남의 공식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으로 공산당이 유일정당인 사회주의공화제이다.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의 동경 102.09~109.30°, 북위 8.10~23.24°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인접하고 있다. 면적은 331,690km²로 한반도의 약 1.5배이고 일본열도보다 조금 큰 면적이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이고, 남부 지역은 열대몬순 성격을 띤다. 남과 북의 기후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평야지대와 고원지대의 기후 또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수도인 북부 지역의 하노이는 춘하추동이 비교적 뚜렷하나 남부의 호치민시와 메콩델타 지역은 연평균 기온 26.9℃로서 우기와 건기로 나뉜다. 한편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및 중부지역은 태풍의 영향권에 있고 연중 기온차이가 심한 편이다. 호치민시는 연중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고 태풍 피해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남부 메콩델타 지역은 태풍 및 침수 피해를 자주 당하는데 고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인구규모는 2004년 8,200여만 명으로 추계되는데 인구밀도는 250명/km²,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96.7명으로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고, 약 75%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없으며 이주하려면 지역 경찰에 등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려면 거주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바 대도시에는 상당수의 불법 농촌이주민이 살고 있다.

종족별로는 베트남 족이 89%를 차지하고 있고, 타이, 므엥, 크메르 등 53개 소수산악민족과 약 100만 명의 화교들이 있다. 전체 국민의 2/3 가량이 불교를 믿고 있다.

출생률은 19.9%, 사망률은 5.6%로 가임여성의 1인당 출산자녀수는 2.3명, 평균수명은 61.35세(2004년 초)이다. 베트남 인구 구조는 완벽한 피라미드 형태로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 약 4천3백만에 달해 적어도 향후 20~30년간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노동력의 질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 보건 상황은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의료수준은 아직 낙후되어 있다.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의료시설, 의약품, 의료기술 등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위생 소독 처리 등이 국제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³

2004년도 경제성장은 제조업과 민간 위주의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계된다. 산업생산은 전년도 대비 16% 증가, 수출은 28% 증가하여 민간소비·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⁴

³ 2003년 말 현재 의사수는 47,200명, 병원수는 13,162개, 병상수 192,900 개이다.

⁴ 2004년도 주요 교역대상국: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순

외국인 직접투자(FDI) 또한 2004년 41.5억 달러로 최근 수년간 최고 투자액 유치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국은 대만이 1위(142건 424백만 달러)이고, 한국 2위(154건 336백만 달러)이다.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426억 달러로서 주요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홍콩 등으로 총투자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15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촌지역 실업률도 5.6%로 낮아지는 등 고용 측면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적자 및 물가상승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도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나 수입도 25% 이상 증가하여 비록 무역수지 적자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55억불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⁵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이 9.5%를 기록하여 주요 경제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경제는 수출과 내수를 축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 주체별로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가, 분야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성장 탄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거품 현상 등 고도성장의 부정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한 국제 경쟁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원자재의 높은 대외 의존도 및 이에 따른 무역 적자 확대, 경제구조 전환 지연 등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는다.

1.3.2. 경제정책

1980~82년 신경제정책을 채택하여 농업·중소기업·수공업 등 민간부

⁵ 베트남의 4대 수출품: 원유, 봉제의류, 신발, 수산물

문 생산을 장려하고 비국영부문의 생산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1983~85년 국영기업의 적자확대, 재정적자 누증, 물가상승 등에 직면하면서 민간부문에 중과세를 부여하고 농업부문의 집단화를 강화하였다.

1986년 ‘도이 머이(Doi Moi: 쇄신)’ 노선을 채택하고 1992년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다. ‘도이 머이’ 개방정책 표방 이후 1992~97년간 연평균 8.6%로 성장하다가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5% 전후로 하락했으나, 2000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는 등 2000년도를 전후하여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안정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경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시장 메커니즘의 취약과 개방속도의 미흡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운용 철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비록 1986년 ‘도이 머이’ 정책 출범과 더불어 수정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나 ‘주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 부분은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중심 주체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지속과 함께 균등 소득분배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 미숙 내지는 경험 일천과 함께 정부의 보수적인 개방정책에 따라 경제 전반에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 개방과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 및 공산당과 국민은 시장경제의 성숙 및 개방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역적인 과정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에 베트남 공산당의 원로원격인 정치국(politburo)이 2004년 봄에 비로소 베트남의 WTO 가입을 공식 승인하였으나 2005년 11월 연내 WTO 가입을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공부문(국영기업)의 경제 내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은 베트남 경제가 ‘괴상한 이중구조(weird dualism)’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베트남의 국내 총투자 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1993~96년간 41%에서 2001~02년간 56%로 확대되었고, 2000~02년 동안, 40억 달러의 공공투자는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동 기간 47억 달러의 민간투자는 175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투자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며, 베트남 경제가 시장 부문과 비시장 부문으로 나뉘어 있음을 입증한다.

베트남 경제의 시장 메커니즘 미숙과 함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자본-토지-투자 간의 3각 악순환 현상을 지속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의식의 미성숙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미흡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효율적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증권시장 또한 대부분의 주요기업이 국영기업(SOE: State Owned Enterprise)인 바, 부동산금은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하노이 도심지대는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거품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⁶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 증가, 여유자금 축적 등의 결과가 대부분 부동산 투기로 이어짐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국내자본이 좀 더 효율적인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 무산, 둘째, 부동산 가격 등귀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는 FDI 기회의 차단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베트남 기업의 자체 생산성과 상품의 국제경쟁력은 아직 하위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출

⁶ 하노이 도심의 평당 지대는 1만 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농업기반공사 2004).

품목이 다변화되는 조짐이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 원유, 농수산물, 노동집약적 섬유류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성 및 경쟁력 정체의 문제는 베트남의 WTO 미가입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WTO 가입 실현과 함께 기업 설립과 투자 절차 간소화,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 및 경영과 관련된 환경의 개선, 국영기업 개혁 및 금융시장의 육성 등이 향후 경제발전의 숙제로 남는다.

1.3.3. 농업·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1991~2000년 동안 농업생산은 연간 5.6%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1인당 식량 생산량은 303kg에서 444kg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식량자급을 달성하였고 연간 3백만 톤의 식량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은 43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1990년의 10억 달러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러나 인구의 77%, 빈곤층의 9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운데, 농촌지역 거주인구 수입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생성되는 바, 국가발전에서 농업 및 농촌이 차지하는 위치는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작지가 제한되어 있고 농산물 시장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농촌과 도시지역간의 빈부격차 및 급격한 이농인구 등으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농업·농촌발전의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먼저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영농의 과학화 및 기술화를 들 수 있다. 나아가 생산, 가공, 판매 등에 대한 농민참여를 촉진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농업, 특히 농촌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원의 다양화 등 경제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가 농촌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에 보다 직접 연결되도록 토지정책, 금융·재정정책을 조정하고 국제기관 및 외국과의 유·무상 차관 등 국제협력 강화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택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토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대별 토지이용료를 차등부과하고 있다. 토지이용료는 입지, 공공시설이용 접근성, 임차인의 경제활동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토지이용료는 계약 기간에 고정되어 있다. 특히, 농림어업생산의 경우 토지이용료는 50% 감면된다. 도시지역 중 제1지역은 하노이, 호치민 등 베트남에서 토지가 가장 비싼 지역이고 각 지역은 다시 4개 등급으로 세분된다. 비도시지역은 거주지와 비거주지로 구분하여 차등적용되는데 농업 및 임업 토지, 수산 관련 토지, 미사용토지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비거주지역의 경우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료가 차등 부과된다.

표 2-1. 베트남 지역별 연간 토지이용료

단위: US\$/m²

도시지역		비도시지역(거주지)		비도시지역(비거주지)(단위: ha)	
제1지역	1.00~12.00	도시접경지역	0.10~1.08	일반지역	100~600
제2지역	0.80~9.60				
제3지역	0.60~7.20	순수농촌지역	0.01~0.36	조건불리지역	30~100
제4지역	0.35~4.20				
제5지역	0.18~2.16				

자료: 김경택(2004. 10)

2. 인구·거시경제·고용구조 비교 분석

2.1. 인구구조

2003년 3개국 인구는 캄보디아 1,350만 명, 라오스 580만 명, 베트남 8,200만 명으로 1980~2003년 동안 각각 연평균 3.3%, 2.5%, 1.9% 성장하였다. 베트남의 인구 증가율은 1990년대 들어 연평균 1%대에 머무름으로써 안정된 인구성장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내전 이후 1990년대 급격한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 연평균 1%대의 안정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연평균 2%대의 완만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3년 현재 남자인구 비중은 캄보디아 48.7%, 라오스 50.0%, 베트남 49.8%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남자의 비중이 1980년 46.3%에서 2003년 48.7%로 연평균 0.22% 증가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내전이 종료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남자구성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부록 4 참조).

2003년 현재 3개국의 인구연령별 분포는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인구비중, 즉 부양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령화 지수가 15 미만인 바 이들 3개국은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비중이 높은 ‘연소인구(young population)’ 구조를 갖고 있다.⁷

⁷ 노령화 지수가 15미만이면 그 사회는 ‘연소인구(young population) 사회’, 30 이상일 경우는 ‘고령인구(aging population) 사회’라 정의한다(김경덕 2004).

표 2-2. 총인구규모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백만 명, () %

	1986	1990	1995	2000	2003	2004
캄보디아	7.7 (2.7)	8.6 (3.6)	10.5 (5.2)	12.6 (1.8)	13.3 (1.9)	13.5 (1.9)
남자비	47.3	47.6	48.1	48.5	48.7	-
라오스	3.7 (2.9)	4.1 (2.1)	4.6 (0.2)	5.2 (2.8)	5.7 (2.8)	5.8 (2.8)
남자비	49.5	49.7	49.8	49.9	50.0	-
베트남	61.1 (2.1)	66.0 (1.9)	72.0 (1.7)	77.6 (1.4)	80.9 (1.5)	82.0 (1.4)
남자비	49.8	49.8	49.8	49.8	49.8	-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5.

표 2-3. 연령구조

연도	국가	부양지수		노령화 지수
		유소년부양지수	노년부양지수	
2003	캄보디아	65.0	4.8	69.8
	라오스	75.3	5.2	80.5
	베트남	48.4	7.1	55.5
2015 ^p	캄보디아	55.4	7.2	62.6
	라오스	62.7	6.2	68.9
	베트남	36.0	8.1	44.1

참고: 부양지수=(15세 미만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유소년부양지수=15세 미만인구/(15~64세 인구)×100

노년부양지수=65세 이상인구/(15~64세 인구)×100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15세 미만인구×100

p는 프로젝트선 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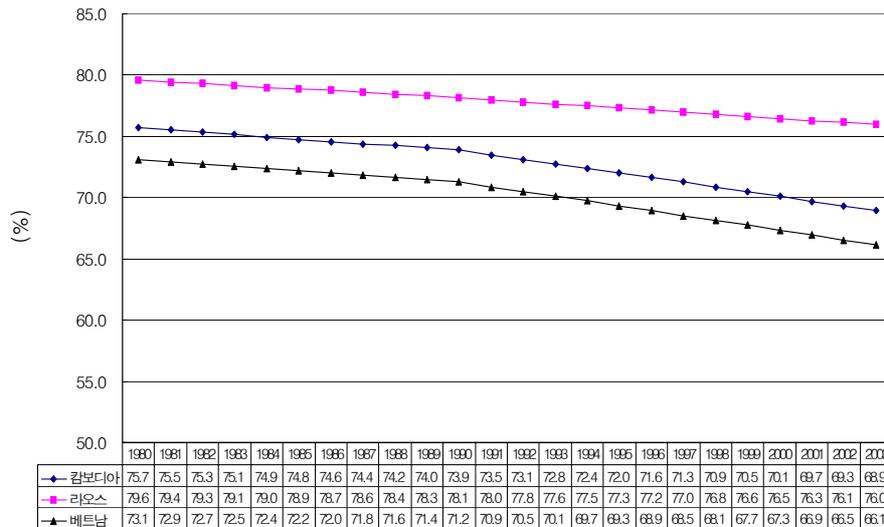
특히, 라오스의 경우 부양지수가 80.5를 기록함으로써 부양인구인 15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의 인구비중이 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유소년 부양지수가 75.3에 이르러 연령 구조가 매우 어리게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 또한 부양지수가 69.8에 달함으로써 비생산연령계층 인구 1인당 생산연령계층 인구 1.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들 2개국은 유소년인구를 인적 자본화하는 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 성장 및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베트남은 3개국 중에서 부양지수가 가장 낮으며 유소년 부양지수가 48.4, 노년 부양지수 7.1로서 완전한 피라미드 형태의 연령구조를 갖고 있다. 향후 20~30년 동안 경제발전에 필요한 풍부한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소년 부양지수가 낮아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형성의 투자 효율성이 높아 양질의 노동 공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2015년도의 프로젝션 결과 베트남의 부양지수는 44.1로 감소하고 그 중 유소년 부양지수는 36.0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령화 지수는 22.4에 불과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령화 지수를 계산하면 5.6에 머물러 향후 20여 년 동안은 베트남의 경우 고령화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⁸

농가인구 비중은 1980년의 70%대에서 2003년에 이르러 60%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3개국 농가인구 비중은 라오스 76.0%, 캄보디아 68.9%, 베트남 66.1%로 베트남의 농가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⁸ 고령화 지수=(65세 이상인구)/(전체인구)×100으로서 『7% 이상~14% 미만: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정의된다(김경덕 2004).

그림 2-1. 농가인구비중 추세



자료:FAO STAT

지난 23년 동안 농가인구 비중의 연평균 감소율은 캄보디아 0.41%, 라오스 0.20%, 베트남 0.44%로서 농가인구 비중의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농가인구 비중의 감소가 연평균 0.2%에 불과하다는 것은 인구의 직업간 이동이 미미한 정태적인 취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베트남의 인구성장률은 1986년 ‘도이 머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증가함으로써 육아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Birdsall 1988). 비농업 부문의 여성 취업자 비중과 증가율은 베트남이 연평균 1.2%로 라오스의 0.75%, 캄보디아의 0.80%보다 0.40~0.45%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베트남 여성의 취업기회가 증가하였

표 2-4. 비농업 부문 여성취업자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

	1990	1995	2000	2003	'03/'95
캄보디아	48	50	52	53	0.80
라오스	42	-	-	47	0.75
베트남	45	49	51	52	1.20

단위: %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5

다는 것을 의미하고, 취업기회 증가로 인한 ‘가사 및 육아’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른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2.2. 거시경제 구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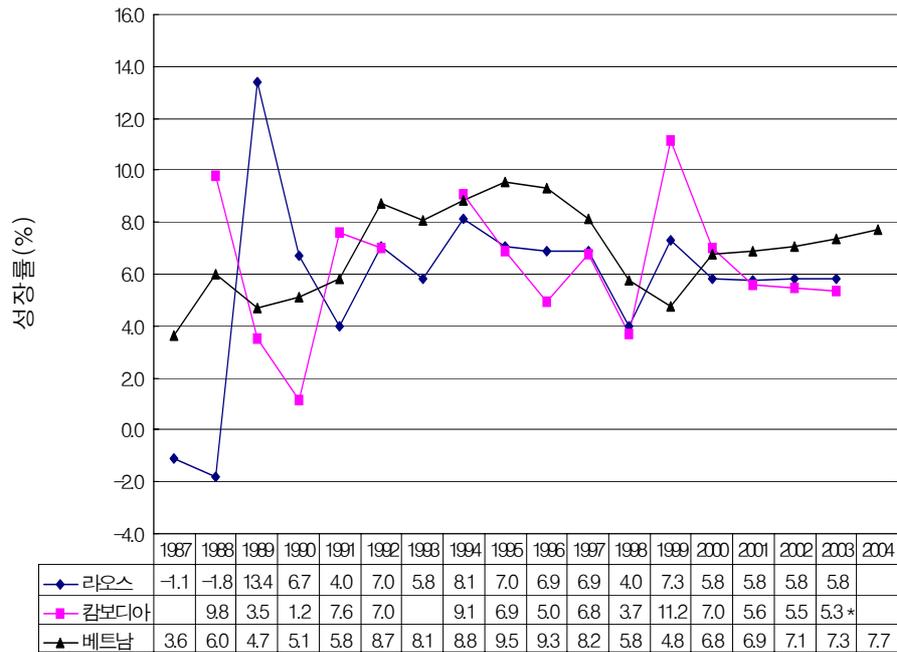
2.2.1. 경제성장률

1990년 이후 국별 연평균 GDP 성장률은 라오스 6.7%, 캄보디아 6.8%, 베트남 7.3%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해거리 현상을 보이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연유한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의 특징 중의 하나는 관개시설의 미비로 기상변화 및 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의 해거리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의 경우 1986년 ‘도이 머이’ 이후 연평균 8%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1990년대 말에 접어들어 5%대로 감소한 것은 미국

⁹ 경제성장률, GDP 지출구조, 국내총저축, 산업부문별 성장기여도 분석을 통해 3개국의 거시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한다.

그림 2-2. GDP 성장률 추이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5

과의 갈등관계와 아시아 경제위기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아시아경제회복과 2002년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 경제는 다시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2.2. GDP 지출구조

GDP 지출구조는 캄보디아의 경우 1990년 민간소비가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투자비중은 8.3%이다. 대외교역정도를 나타내는 수출입규모는 GDP의 10.8%에 불과한 폐쇄적 경제구조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90년 중후반부터 민간소비 비중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투자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 투자비중은 두 자리수인 14.6%로 급등하였고 2001년부터 20%를 넘고 있다.

이처럼 투자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1989년 캄보디아국 체제하에서 사유재산 인정 및 민영화추진 등 탈공산주의 정책의 도입, 1993년 입헌군주국으로 재건국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함께 개방정책의 결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무역적자를 겪고 있지만 대외 개방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 총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입 규모를 합한 교역규모의 GDP 비중은 1990년 10.8%에서 2003년 126.5%로 급등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 중반에 접어들어 투자비중이 30%에 육박하다가 2001년부터 30%를 넘어서는 등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표 2-5. GDP 지출구조 비중

단위: %

연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캄 보 디 아	민간소비	90.4	97.7	87.6	84.7	81.9	84.4*	-
	정부지출	7.2	5.0	5.3	5.7	5.8	6.2*	-
	투자	8.3	14.6	17.2	21.2	22.2	22.6*	-
	수출	2.4	31.7	50.7	54.3	59.1	59.9*	-
	수입	8.4	48.2	62.8	64.3	67.3	66.6*	-
	순수출	-6.0	-16.5	-12.0	-10.0	-8.2	-6.7*	-
베 트 남	민간소비	84.8	73.6	66.5	64.9	65.1	66.3	65.3
	정부지출	12.3	8.2	6.4	6.3	6.2	6.3	6.4
	투자	12.6	27.1	29.6	31.2	33.2	33.8	35.5
	수출	36.0	32.8	55.0	54.6	56.8	60.0	67.1
	수입	45.3	41.9	57.5	56.9	62.0	67.0	74.9
	순수출	-9.2	-9.1	-2.5	-2.3	-5.2	-7.0	-7.8

*는 추정치임.

자료: ADB Key Indicator, 2005에서 가공.

1990~2003년 동안 국내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에서 35.5%로 연평균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은 교역규모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도이 머이’ 초창기인 1990년 48.6%에 불과하던 수출입규모가 2004년에는 142.0%로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베트남의 경제구조는 대외교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개방구조로 변모하였다. 한편, 베트남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1차상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2.3. 국내총저축

국내총저축(gross domestic saving) 규모는 캄보디아의 경우 GDP의 10% 이내에서 변동하고 있다. 국내투자와의 차이는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를 포함한 차관 및 원조로 충족되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국내자본으로 국내투자를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베트남의 경우는 국내총저축이 1990년 2.9%에서 2004년의 28.3%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내총저축 규모는 GDP의 20%를 넘어섰고 국내자본만으로 국내투자규모의 일정 규모를 조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국내 총저축규모 비중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캄보디아	2.3	-2.7	7.1	9.7	12.2	9.4 *	-
베트남	2.9	18.2	27.1	28.8	28.7	27.4	28.3

*는 추정치임

자료: ADB Key Indicator에서 가공

그러나 위의 무역수지적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총투자와 국내 총저축 간의 괴리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차관으로 충족된다. 베트남의 무역수지 적자는 GDP의 10% 이내에서 안정되게 머물고 있다.

2.2.4. 산업부문별 성장기여도

산업부문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GDP 성장기여도를 분석한다.¹⁰ 성장기여도는 부문별 성장률과 해당부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곱으로 나타난다. 물론 부문별 성장기여도의 합은 경제성장률과 동일하다.

10

$$\begin{aligned}
 Y_t &= \sum_i Y_t^i \\
 \frac{\partial Y}{\partial t} &= \sum_i \frac{\partial Y_t^i}{\partial t} \\
 \Rightarrow g &= \frac{\frac{\partial Y_t}{\partial t}}{Y_t} = \sum_i \frac{\frac{\partial Y_t^i}{\partial t}}{Y_t} \\
 &= \sum_i \frac{\frac{\partial Y_t^i}{\partial t}}{Y_t^i} \frac{Y_t^i}{Y_t} \\
 &= \sum_i s_i g_i
 \end{aligned}$$

- 여기서 Y_t^i 는 t 기의 i 부문 GDP, s_i , g_i 는 각각 GDP에서 i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i부문의 성장률
- $s_i g_i$ 가 GDP 성장에 i부문의 성장기여율

캄보디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경제성장률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농업부문의 부침에 의하여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았고 그 후로는 제조업부문의 성장이 전체 경제성장률에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제조업부문의 성장기여율은 연평균 3.7%, 2000년 7.3%, 2002년 4.9%, 2003년 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경우 제조업의 부침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제조업부문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운송, 통신 등 교역원활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제조업의 성장여건 구비와 함께 농업부문의 안정된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정책도입이 요청된다.

그림 2-3.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율: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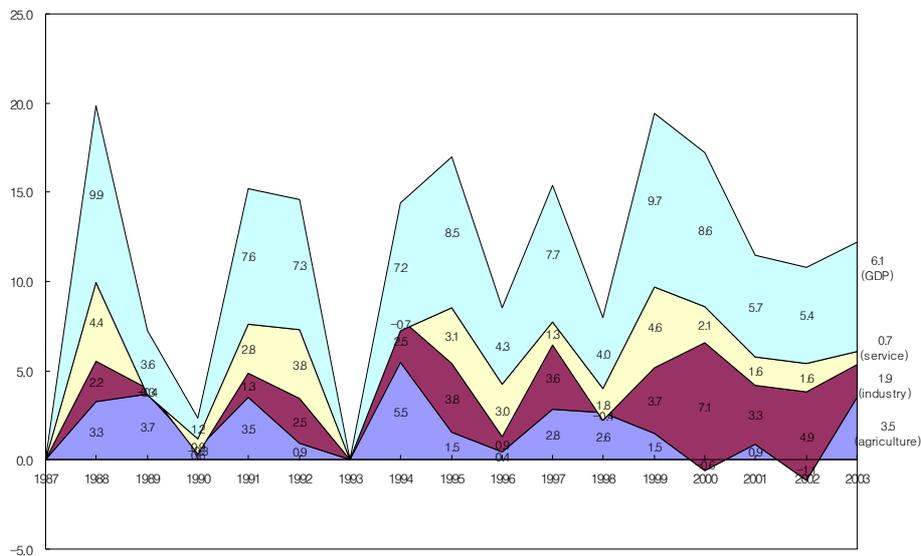


그림 2-4.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율: 라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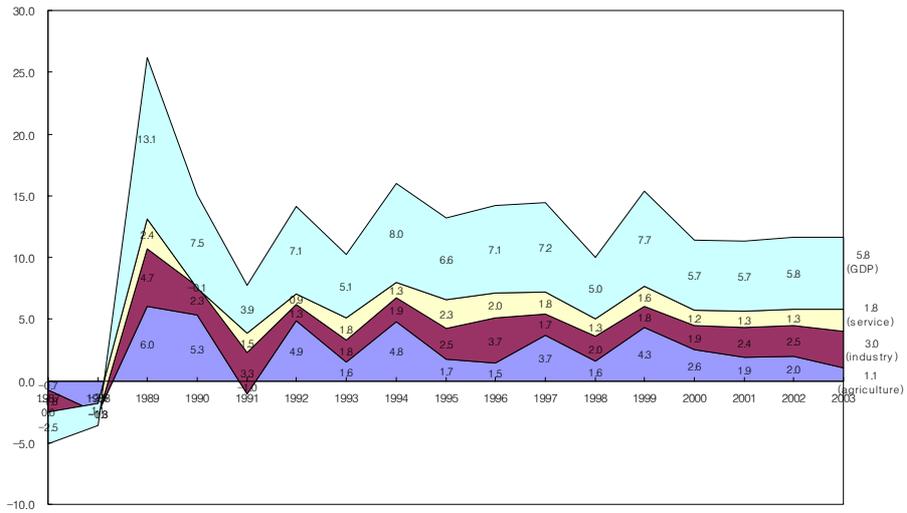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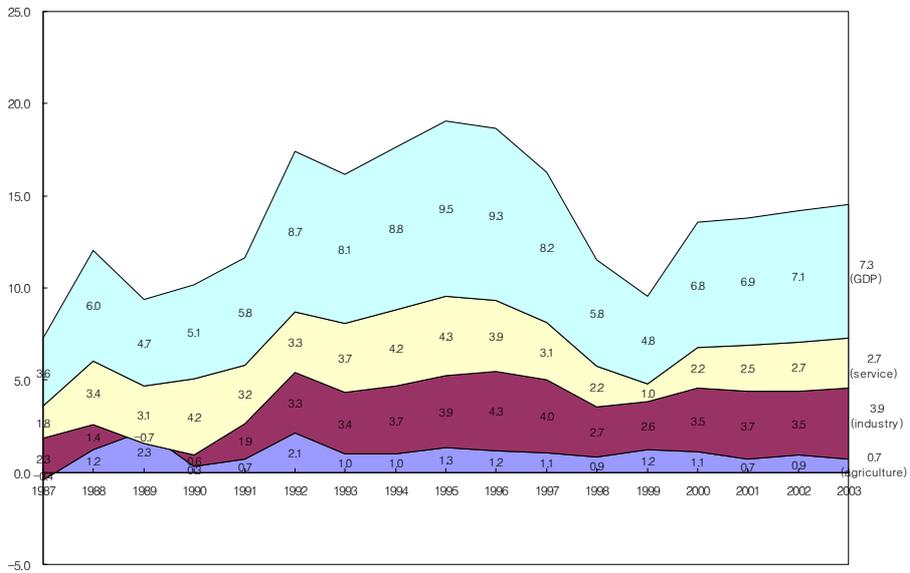


그림 2-5.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율: 베트남



반면 라오스는 2000년까지도 농업부문이 국내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 또한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농업부문의 GDP 성장 기여율은 1991년 -1.1%, 1992년 4.9%, 1993년 1.6%, 1994년 4.8% 등으로 부침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는 라오스 최대의 수출품인 섬유제품을 위주로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부문은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향후 라오스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은 안정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에 접어들어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부문의 성장기여율은 1% 내외로 저조하고 제조업은 3%대에서 안정되게 성장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2%대 후반에서 안정되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 고용구조

인도차이나 반도의 고용구조는 농업부문이 취업인구의 2/3 이상을 흡수하는 개발도상국의 전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제조업 및 광업 부문에는 취업인구의 10% 내외가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업에는 20~30%의 취업인구가 종사하고 있다.

그림 2-6. 산업 부문별 고용비중: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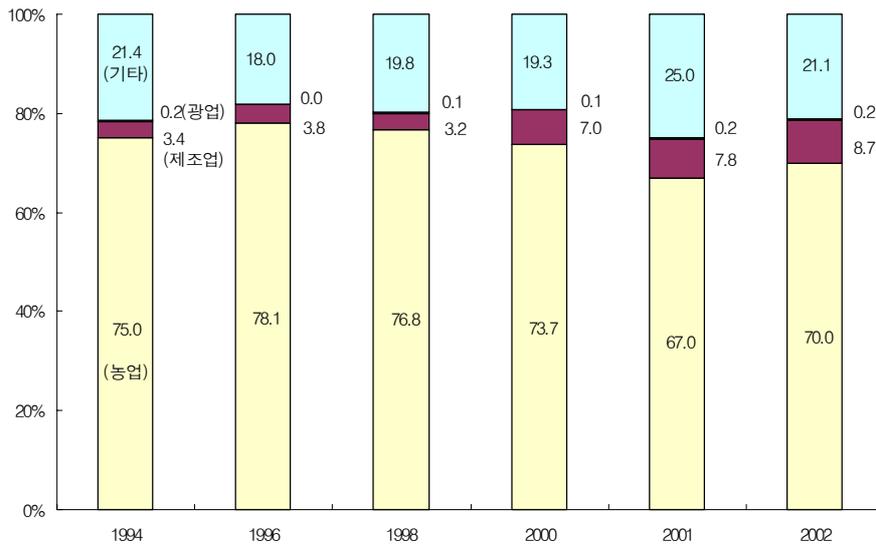


표 2-7. 노동 및 고용 현황: 캄보디아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취업인구(천명)	3944	4456	4909	5275	6243	6400
농업	2959	3482	3771	3889	4180	4480
제조업	134	169	159	367	488	556
광업	8	1	6	3	14	11
기타	843	804	973	1016	1562	1353
미취업인구				134	116	
실업률(%)	2.5	0.9	5.3	2.5	1.8	
노동시장참여율(%)	56.6	65.4	55.5	65.2	71.7	
남성	58.1	65.8	66.3	66.2	72.1	
여성	55.4	65.1	65.9	64.4	64.4	

출처: ADB, Key Indicator, 2004

그림 2-7. 산업 부문별 고용비중: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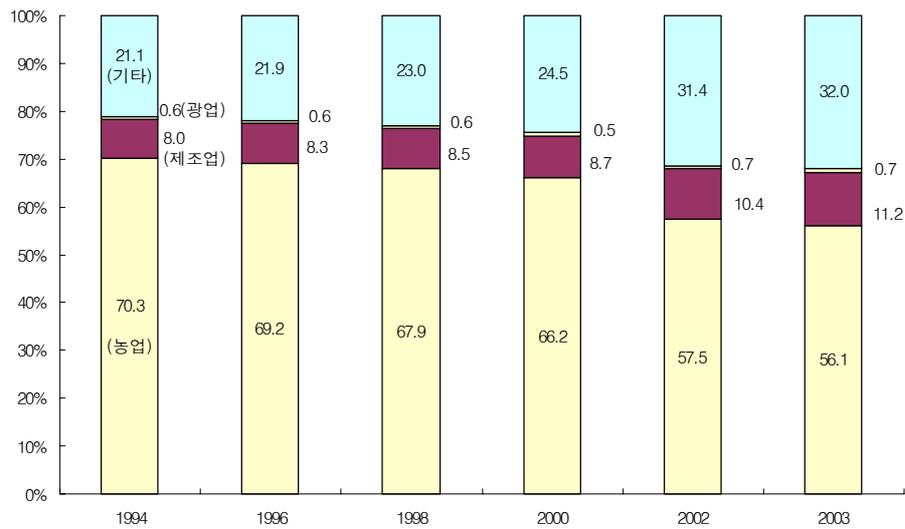


표 2-8. 노동 및 고용 현황: 베트남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취업인구(백만명)	32.3	33.8	35.2	36.7	37.7	40.5	41.2
농업	22.7	23.4	23.9	24.3	24.5	23.3	23.1
제조업	2.6	2.8	3.0	3.2	3.3	4.2	4.6
광업	0.2	0.2	0.2	0.2	0.2	0.3	0.3
기타	6.8	7.4	8.1	9.0	9.7	12.7	13.2
미취업인구			1.7	1.7	1.7	0.7	0.7
실업률(%)			4.5	4.4	4.3	1.7	1.7
노동시장참여율(%)						53.8	51.8
남성						49.6	53.9
여성						49.6	49.7

출처: ADB, Key Indicator, 2004

캄보디아의 경우 2002년 기준으로 취업인구의 70.0%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21.1%, 제조업 및 광업부문은 8.9%에 불과하다. 1994~2002년 동안 캄보디아의 취업인구는 연평균 10.4% 증가하였다. 그 중 농업부문은 8.6%, 제조업 52.5%, 기타서비스업 10.1% 증가하였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4년 56.5%에서 2002년 71.7%로 15.1%p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3.0%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4년 58.1%에서 2001년 72.1%로 연평균 2.7% 증가하였고, 여자는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실업률은 1994년 2.5%에서 2002년 1.8%로 감소하였다.

베트남은 1994년 취업인구가 32.3백만명에서 2004년 41.2백만 명으로 연평균 2.7% 증가하였다. 그 중 농업부문 취업인구는 연평균 0.2% 증가한 반면 제조업 및 광업 부문은 6.2% 증가하였고, 서비스업부문은 7.4% 증가하였다. 그 결과 농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은 1994년 70.3%에서 2003년 56.1%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부문과 제조업 및 광업부문은 21.1%(1992년)에서 32.0%(2003년)로, 그리고 8.6%(1994년)에서 11.9%(2003년)로 각각 증가하였다. 고용구조가 전통적인 농업부문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부문이 고용흡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장

농업·농촌 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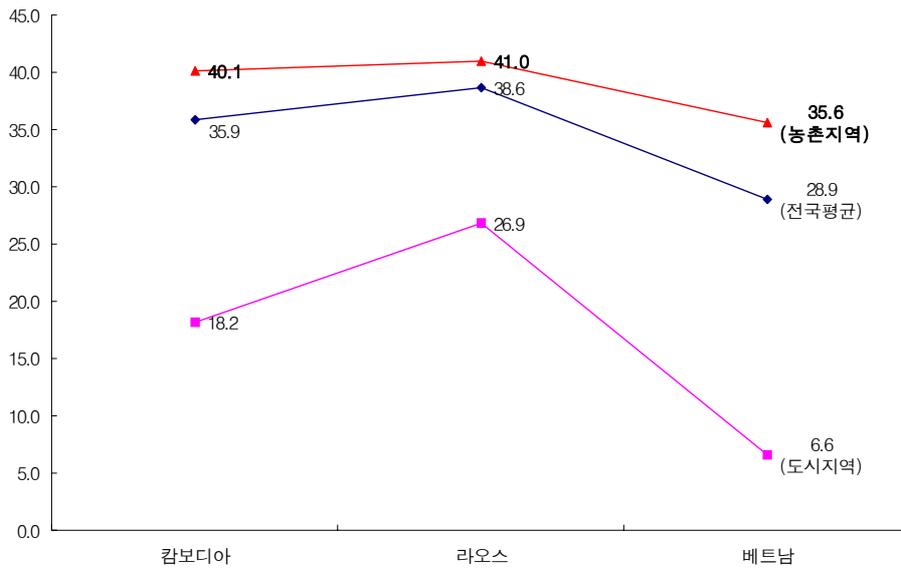
1. 빈곤 및 도농격차

1.1. 빈곤과 소득분배

빈곤(poverty)은 현재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층·지역 간 분배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은 국가빈곤률(national poverty rate)의 기준과 측정기준년도가 상이하지만 전인구의 1/3 가량이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UNDP 2005).

캄보디아의 경우 1999년 기준으로 35.9%가, 라오스는 1997년 기준으로 38.6%, 베트남은 2002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28.9%가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다. 빈곤선의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빈곤율: 국가별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단, 각 국별 기준 연도는 상이함. 캄보디아(1999년 기준), 라오스(1997년 기준), 베트남(2002년 기준) 등임.
 자료: UNDP(2005)에서 재가공.

표 3-1. 하루 PPP 1달러 이하 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하루 1달러 (PPP 기준) 이하 인구 비중(%)	자료 기준 연도
캄보디아	34.1	(1997)
라오스	39.0	(1997)
베트남	13.1	(2002)

출처: ADB, Key Indicator 2004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1일 소득 1달러(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이하의 인구비중은 베트남이 가장 낮은 13.1%, 그 다음으로 캄보디아 34.1%, 라오스 39.0%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가빈곤선 기준은 1일 PPP 1달러 선과 유사한 반면 베트남의 경우 1일 PPP 1달러로 환산한 인구비중이 국가빈곤선에 따른 인구비중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인근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달리 물가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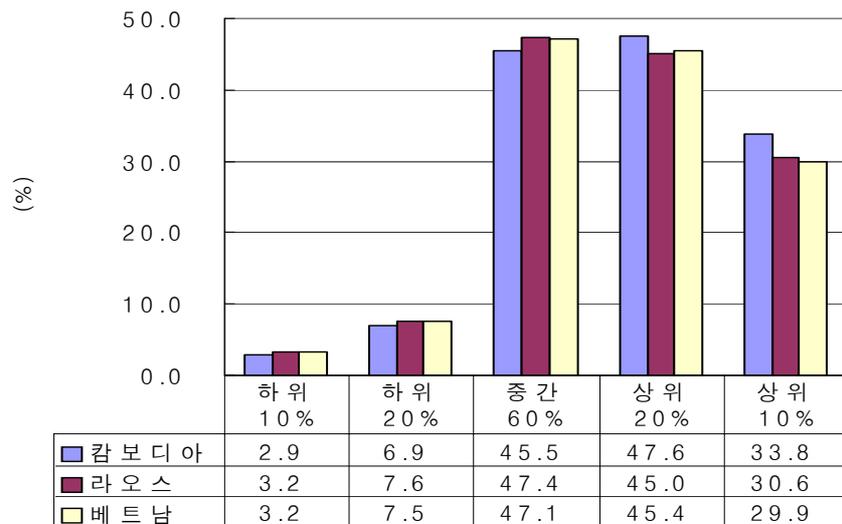
절대빈곤과 달리 계층 간 소득의 상대적 박탈감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위 소득그룹과 상위 소득그룹의 소득점유 비중을 살펴본다. 먼저 소득이 계층 간 동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Index)는 캄보디아가 40.4로 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라오스와 베트남은 37.0으로 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35.0을 초과함으로써 이들 국가 또한 계층 간 소득분배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라오스와 베트남의 소득분배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을 하위 1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라오스에서는 9.7로 베트남의

¹¹ 미국현지에서 1달러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 바스켓을 현지화폐로서는 얼마만큼 지불하여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질환율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현지와 미국의 물가에 연동된다. World Bank는 PPP 1달러를 절대빈곤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¹²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50~70에 속하면 ‘고불평등소득분배(highly unequal income distributions)’, 20~35에 속하면 ‘상대적 평등소득분배(relatively equitable distributions)’ 구조를 가진다고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Todaro & Smith 2003, p201).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31.6(1998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불평등도 분포



표본조사년도: 캄보디아(1997), 라오스(1997), 베트남(2002년)

자료출처: UNDP(2005)에서 가공.

표 3-2. 계층 간 소득분배 및 지니계수

	상위10%/하위10%	상위20%/하위20%	지니계수
캄보디아	11.6	6.9	40.4
라오스	9.7	6.0	37.0
베트남	9.4	6.0	37.0

표본조사년도: 캄보디아(1997), 라오스(1997), 베트남(2002년)

자료출처: UNDP(2005)

9.4보다 높다. 이는 라오스의 소득분배구조가 베트남에 비하여 최상위 소득그룹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소득분포의 하위 20%와 상위 20%를 제외한 중간 60%가 차지하는 소

득비중은 라오스가 47.4%, 베트남이 47.1%로 나타남으로써 라오스와 베트남은 소득계급간 분배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소득 중간계급 60%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45.5%로 베트남과 라오스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난다.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라오스, 베트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1.2. 도농 격차

1.2.1. 소득격차

도농 간 소득격차 현황은 국가빈곤선을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비록 국가 간 빈곤선 정의는 상의하나 국가 내 도농 간의 빈부 격차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

도농 간 빈곤격차는 베트남이 29%p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캄보디아가 21.9%p, 라오스가 14.1%p이다. 베트남의 경우 라오스와 동일한 소득분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개발 초창기에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풍부한 도시지역 중심의 개발전략을 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베트남의 경우 도시화율이 라오스보다 높고 농촌으로부터 유입인구가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¹³

¹³ 다음 절 “도농간 인구이동”에서 인구이동이 도시화에 미친 정도가 국가별로 비교 분석된다.

표 3-3. 도농 간 상수도 및 공중위생 접근성

단위: %

국가	지역	상수도 접근성		공중위생접근성	
캄보디아	농촌	12.0	34	-	16
	도시	20.0		-	
라오스	농촌	39.0	43	13.0	24
	도시	40.0		70.0	
베트남	농촌	32.0	73	15.0	41
	도시	53.0		43.0	

주: 전국 평균은 2002년 수치이고, 도농비교자료는 1990~96년의 평균치임
자료: UNDP(2005).

한편 상수도 및 공중위생접근성은 베트남이 인근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의 전국 평균 상수도 접근비중은 73%인데 반해, 라오스는 43%, 캄보디아는 34%로 나타났다. 공중위생접근성 또한 베트남의 경우 41%, 라오스 24%, 캄보디아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수도 접근성의 도농 간 비교에서는 라오스가 베트남보다 격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상수도 접근성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라오스의 경우 1~2개 지역으로 도시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고 산악지대의 경우 소수민족 단위로 집단거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2.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격차

UNDP(2003)의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등급을 이용하여 국가별 농업부문과 비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바 있다. 개발도상국인 ‘저위인간개발국가(low-human

표 3-4. 부문별 노동생산성

	농업부문 고용비중(%)		고용일인당 부가가치 (1995 불변가격, US\$)		노동생산성격차 (비농업부문/농업부문)
	1990	2000	농업부문 (2000)	비농업부문 (2000)	
캄보디아	73.8	70.1	358	1,069	3.0
라오스	78.2	76.5	617	1,846	3.0
베트남	71.2	67.3	254	1,649	6.5
저위인간개발국가	79.6	75.2	260	1,752	7.1
중위인간개발국가	40.1	30.3	1,654	4,277	2.5
고위인간개발국가	7.1	5.2	24,310	35,224	1.8

저위인간개발국가(Low-Human Development Countries): HDI < 50

중위인간개발국가(Medium-Human Development Countries): 50 ≤ HDI < 80

고위인간개발국가(High-Human Development Countries): 80 ≤ HDI

자료: UNDP(2003)에서 가공

development contries)’와 ‘중위인간개발국가(medium-human development contries)’의 2000년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고용인구 1인당 부가가치 중간값(median)은 1995년 불변가격으로 260 달러와 1,752 달러이다. ‘중위인간개발국가’는 1,654 달러, 4,277 달러, ‘고위인간개발국가’는 24,310 달러, 35,224 달러로 나타났다.¹⁴ 그 결과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저위인간개발국가’ 7.1, ‘중위인간개발국가’ 2.5, ‘고위인간개발국가’ 1.8로 계산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일수록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¹⁴ HDI가 80이상이면 ‘고위인간개발국가’, 50이상 80미만일 경우 ‘중위인간개발국가’, 50미만일 경우 ‘저위인간개발국가’로 분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각각 ‘중위인간개발국가’로 분류되는데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간의 평균 노동생산성 격차는 해당 그룹 중간값인 2.5를 상회하는 3.0, 3.0, 6.5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일인당 노동생산성 격차가 해당 그룹의 중간값보다 2.6배 높게 나타남으로써 농업부문의 상대적 낙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기후 및 토양 조건, 종자개발 등 생산 여건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노동투하량, 즉 농업부문에 유휴노동력(idle labor)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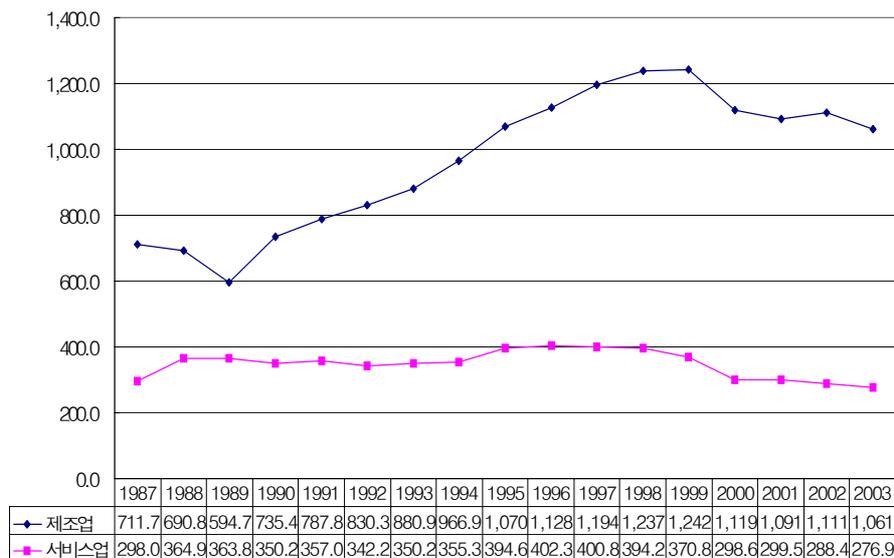
농업생산여건과 관련하여 ‘저위인간개발국가’ 및 ‘중위인간개발국가’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이들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는 데에 있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이 속하고 있는 온대기후대에 비하여 기후 및 토양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아열대기후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의 연구개발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아열대 기후가 산림과 다양한 생물종의 생존환경은 우수하지만 집중호우 및 뜨거운 대기열 등으로 토양침식과 유실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흐린 날씨로 생육기 일조량이 결구 등 식량작물의 생육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그 결과 아열대 지역의 농업생산성은 비록 동일한 농업생산 투입재를 투여한다 하더라도 온대지역에 비하여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Gallop and Sacks 2000). 아열대 지대에 적합한 농업 연구 및 개발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일반적 농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은 한계가 있다.

¹⁵ 특히, 밀림과 협곡 등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은 집중호우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저수지구축의 지형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림 3-3. 베트남의 부문별 일인당 노동생산성지수

(농업부문 1인당 노동생산성=100)



자료: ADB, Key Indicators

농업노동 투하량과 관련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농업부문 고용비중은 ‘중위인간개발국가’의 중간값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 및 지형 조건이 식량작물을 생산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생산 방식을 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베트남의 경우 농업부문 고용비중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비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부가가치가 낮다는 것은 농업부문에 유희노동력이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주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림 3-4. 캄보디아의 부문별 일인당 노동생산성지수

(농업부문 1인당 노동생산성=100)



자료: ADB, Key Indicators.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평균 노동생산성의 추이는 <그림 3-3>, <그림 3-4>와 같다. 농업부문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1인당 GDP를 지수화한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에 접어들어 농업부문 노동생산성과 비교하여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서비스업 부문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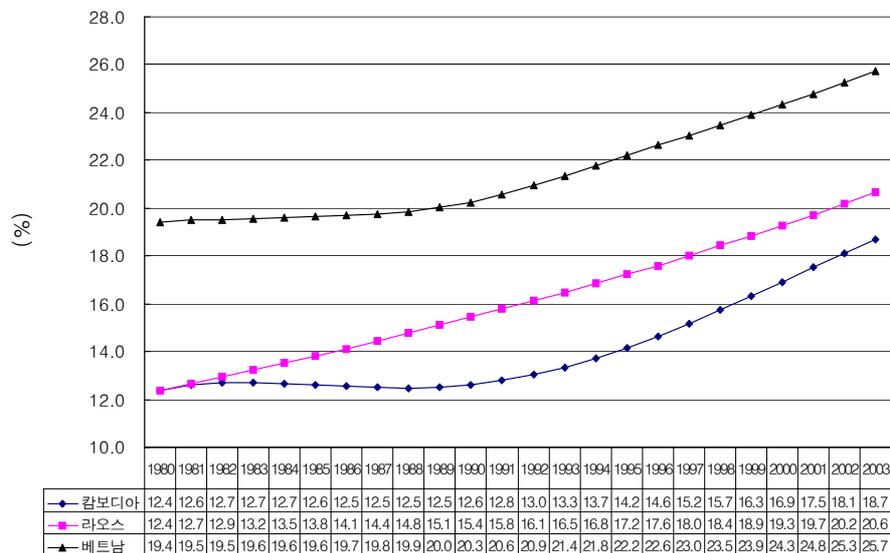
반면, 캄보디아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은 안정되어 있는데 제조업부문의 농업부문에 대한 상대적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심한 것은 농업부문 자체의 생산성 변화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농간 인구이동

2.1. 도시화율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중인 '도시화율(degree of urbanization)'의 변화추세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촌 및 이농 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3-5. 도시화율 추이



자료: FAO STAT에서 재구성.

1980~2003년 동안 도시화율 변화 정도는 베트남이 연평균 1.2%, 캄보디아는 1.8%, 라오스가 2.2%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캄보디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라오스의 경우 도시화율이 캄보디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과 제2의 도시인 루앙프라방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이동이 도시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인구이동에 의한 도시화 정도(PCMUR: percentage contribution of migration to urban growth)’는 수식 (3-2)와 같이 정의된다. 먼저 해당 연도의 ‘도시인구’, ‘도시순출생인구’, ‘도시순이입인구’의 변화율간의 관계는 수식 (3-1)과 같다.¹⁶

$$\begin{aligned} \frac{d \ln (P_u)}{dt} &\simeq \frac{d \ln (N_u)}{dt} + \frac{d \ln (M_u)}{dt} \\ \frac{d \ln (M_u)}{dt} &\simeq \frac{d \ln (P_u)}{dt} - \frac{d \ln (N_u)}{dt} \end{aligned} \quad (3-1)$$

여기서 P_u , N_u , M_u 는 각각 도시인구, 도시순출생인구, 도시순이입인구를 나타낸다.

국제 간의 인구이동이 크지 않을 경우, 도시지역의 인구자연증가율과 농촌지구의 인구자연증가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위

¹⁶ 수식 (3-1)에서 근사등호를 사용한 이유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재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두 번째 식은 다음 수식 (3-2)의 첫 번째 식과 같이 변형된다. 이 식을 도시인구 증가율로 양변을 나누면 도시인구증가에서 이촌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할 수 있다.

$$\frac{d \ln(M_u)}{dt} \simeq \frac{d \ln(P_u)}{dt} - \frac{d \ln(TP)}{dt} \quad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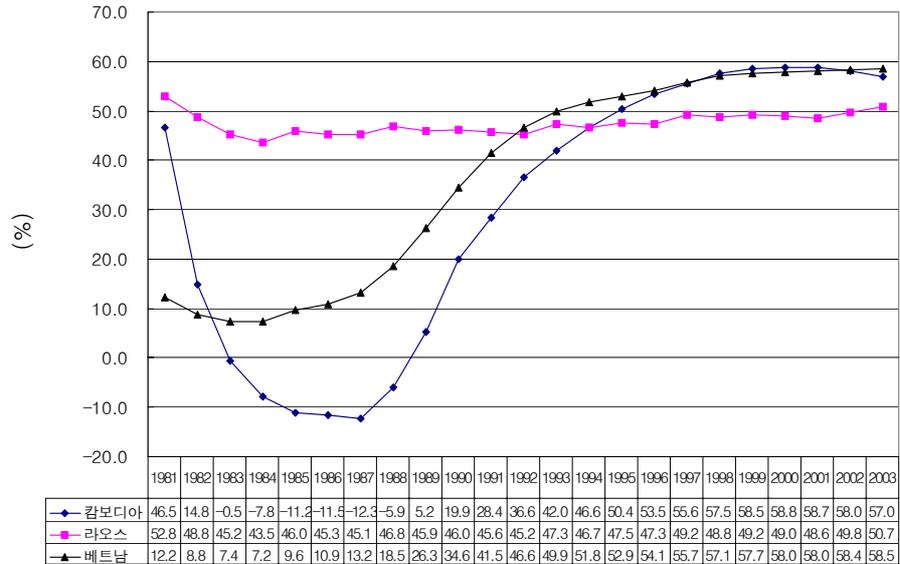
$$\frac{d \ln(M_u)}{dt} / \frac{d \ln(P_u)}{dt} \simeq \left[\frac{d \ln(P_u)}{dt} - \frac{d \ln(TP)}{dt} \right] / \frac{d \ln(P_u)}{dt}$$

여기서 TP는 총인구를 나타낸다.

베트남은 ‘도이 머이’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본격화되었다. 비록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는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도시부 인구 증가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말 현재 베트남의 도시부 인구 증가 요인의 58.5%가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에 의한 것으로 추계된다.

캄보디아의 경우 ‘킬링필드’ 시대인 1980년대에는 도시인구의 농촌으로의 강제이동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인구 유입으로 인한 도시인구 증가는 오히려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어 비로소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2003년 현재 도시인구 증가의 57%가 농촌으로부터의 인구이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계된다. 라오스는 지난 20여 년 동안 평균 도시인구 증가에서 농촌으로부터의 이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림 3-6.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도시화 정도에 미친 영향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개발도상국(less developed country)의 PCMUR의 평균치는 모두 45.4%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평균치는 각각 64.8%, 53.0%로 추계된다(Kim, 1996). 따라서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율에서 이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가깝다는 것은 향후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도시지역 인구편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수반한다. 비록 법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이촌이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농촌에 소득원 창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구비되지 않는 한 농촌으로부터의 이주를 법적규제만으로 막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과도한 이촌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전략이 요구되나 이는 경제발전 초기의 한정된 자원의 투자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2.2. 도시화 정도 결정요인

도시화가 어느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시화 정도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 먼저 도시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인당 GDP’, ‘비농업부문 경제활동인구’, ‘비농업부문의 GDP 비중’ 등을 상정한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1차 산업인 농업부문의 취업자 비중이 낮아지고 2차 산업인 광업 및 제조업,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 등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즉 경제가 성장할수록 효율적인 공간이용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도시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 결과 비농업 부문의 GDP비중이 증가하고 비농업 부문의 GDP비중의 증가는 공간입지상 도시화율을 증가시킨다. 이를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n(UB) = a + b\ln(PGDP) + c\ln(LFNA) + d\ln(NFIND) + e$$

여기서 UB: 도시화정도, PGDP: 일인당 실질GDP(US\$표시), NFIND: 비농업 부문의 GDP 비중, LFNA: 비농업 부문 경제활동인구비중

1980~2003년의 23개년치의 3개국 자료를 혼합(pooling)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3-5>에 요약되어 있고, AR(1)과 MA(1)은 각각

계열상관의 문제를 우회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기상관과 이동평균 변수이다.

<추정모형 1>에서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의 도시화는 일인당 실질소득과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에 의하여 유효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보다는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인구비중에 의하여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도시화율에 미치는 탄력도는 '0.042337'에 불과하나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인구의 탄력도는 '1'에 가까운 '0.931993'으로 계측되었다.

표 3-5. 도시화 정도 결정요인 추정결과

종속변수 ln(UB)	모형 1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	모형 2 (베트남)
상수	-4.691235 (-11.88132)	-3.995763 (-9.029411)
ln(PGDP)	0.042337 (5.341877)	0.047886 (2.696310)
ln(LFNA)	0.931993 (20.59750)	-
ln(NFIND)	-	0.524088 (4.495317)
AR(1)	0.984272 (73.61764)	-
MA(1)	-	0.911601 (14.82676)
	Adj-R ² =0.992075 Prob(F-값)=0.000000 D-W 값=1.578547	Adj-R ² =0.930787 Prob(F-값)=0.000000 D-W 값= 1.501252

()는 t 값.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촌이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제활동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도시의 특성상 사회·경제 여건이 양호한 특정 장소에 집중되어 입지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s)’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현재의 일인당 소득뿐만 아니라 도시에 함께 집중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고 이로 인해 취업 및 소득기회가 증대하여 미래 소득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일인당 국민소득과 GDP에서 비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화 정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추정모형 2>. 앞의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 전체의 경우와 같이 베트남 또한 일인당 국민소득이 도시화에 미치는 탄력도는 ‘0.047886’, 집적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비농업 부문의 GDP 비중의 탄력도는 ‘0.524088’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이 집적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는 캄보디아 및 라오스와 달리 경제성장 및 발전의 초기 단계를 거치면서 비농업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보다는 비농업 부문의 GDP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과 비농업 부문의 GDP비중 간의 탄력도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비농업 부문의 성장 및 발전이 일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교통, 커뮤니케이션 및 네트워크 등의 효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베트남의 경우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비농업 부문의 종사자가 85%로 상승할 경우 도시화 정도는 64% 가량

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2003년말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US\$471인 바 지난 1980~2003년 동안 연평균 7.3%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2013년경에 인구의 2/3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부양지수는 44.1, 노령화 지수는 22.4, 고령화 지수는 5.4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노령화에 따른 유효노동력의 부족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인적 자본의 유출로 인한 유효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¹⁷ 농촌지역 내에서 유효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소득원의 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없이는 농업부문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 기여도로 인해 향후 농업부문에서 비농업 부문으로,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인적 자본의 이동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농업생산성

3.1. 농업생산여건

2002년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농경지비중은 캄보디아 21.6%, 라오스 4.3%, 베트남 27.3%로 나타났다. 농경지 중에서 관개시설이 구비된 면적은 캄보디아 7.1%, 라오스 17.5%, 베트남 33.7%로 나타났다. 라오스가 캄보디아보다 관개수리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메콩강변의 수도작 논농업 지대에 농경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¹⁷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내전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미복구 등은 물론이고 농업기반시설 및 품종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내전으로 파괴된 농촌지역 도로 및 사회

표 3-6. 농지이용현황

단위: 1,000ha

연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농지(A)	농경지비중(%)	관개면적(B)	B/A(%)	농지(A)	농경지비중(%)	관개면적(B)	B/A(%)	농지(A)	농경지비중(%)	관개면적(B)	B/A(%)
1980	2,070	11.7	120	5.8	806	3.5	115	14.3	6,570	20.2	1,700	25.9
1981	2,070	11.7	125	6.0	809	3.5	116	14.3	6,580	20.2	1,800	27.4
1982	2,100	11.9	130	6.2	817	3.5	118	14.4	6,580	20.2	2,000	30.4
1983	2,110	12.0	140	6.6	820	3.6	118	14.4	6,590	20.2	2,100	31.9
1984	2,110	12.0	160	7.6	830	3.6	118	14.2	6,590	20.2	2,300	34.9
1985	2,370	13.4	180	7.6	835	3.6	119	14.3	6,421	19.7	2,500	38.9
1986	2,680	15.2	200	7.5	838	3.6	120	14.3	6,400	19.7	2,600	40.6
1987	3,080	17.4	210	6.8	840	3.6	120	14.3	6,387	19.6	2,700	42.3
1988	3,530	20.0	220	6.2	850	3.7	125	14.7	6,380	19.6	2,700	42.3
1989	3,785	21.4	230	6.1	852	3.7	130	15.3	6,380	19.6	2,800	43.9
1990	3,795	21.5	240	6.3	860	3.7	135	15.7	6,384	19.6	2,900	45.4
1991	3,800	21.5	250	6.6	862	3.7	140	16.2	6,425	19.7	2,900	45.1
1992	3,800	21.5	260	6.8	864	3.7	145	16.8	6,697	20.6	2,900	43.3
1993	3,819	21.6	269	7.0	865	3.7	150	17.3	6,759	20.8	3,000	44.4
1994	3,805	21.6	270	7.1	890	3.9	155	17.4	6,812	20.9	3,000	44.0
1995	3,807	21.6	270	7.1	900	3.9	155	17.2	6,751	20.7	3,000	44.4
1996	3,807	21.6	270	7.1	900	3.9	156	17.3	7,004	21.5	3,000	42.8
1997	3,807	21.6	270	7.1	930	4.0	164	17.6	7,202	22.1	3,000	41.7
1998	3,807	21.6	270	7.1	940	4.1	168	17.9	7,413	22.8	3,000	40.5
1999	3,807	21.6	270	7.1	955	4.1	172	18.0	7,771	23.9	3,000	38.6
2000	3,807	21.6	270	7.1	958	4.2	175	18.3	8,138	25.0	3,000	36.9
2001	3,807	21.6	270	7.1	961	4.2	175	18.2	8,841	27.2	3,000	33.9
2002	3,807	21.6	270	7.1	1,001	4.3	175	17.5	8,895	27.3	3,000	33.7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간접자본이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는 관개 시설면적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 특성상 농촌지역의 도로·교통·통신수단이 갖춰지지 않아 농업과 농촌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식량자급을 달성하였고 쌀의 경우 세계 제2위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생산·가공·유통의 연계조직과 수확 후 처리시스템의 미발달로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3.2. 농업생산성

1980~2004년 동안 농업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베트남 5.0%, 라오스 4.2%, 캄보디아 4.1%로 나타났다. 경종작물의 경우 베트남은 연평균 4.8%,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각각 4.1%,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식량작물의 경우 베트남은 연평균 4.8%,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각각 3.8% 성장하였다. 비식량작물은 베트남 7.9%, 캄보디아 5.0%, 라오스 3.2%의 순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경우 비식량작물의 생산성이 식량작물의 생산성 증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라오스는 식량작물의 생산성 향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라오스의 경우 국민식량자급이라는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및 교통 등 인프라 부족으로 농산물 시장 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여 비식량작물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상업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커피, 사탕수수 등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식량작물의 생산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축산의 경우는 캄보디아가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베트남과 라오스는 각각 6.6%,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총생산성의 변화 추이는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접어들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1980년대부터, 라오스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부침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농업생산성 부침에서 축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증가를 보이거나 식량과 비식량작물을 포함한 경종작물의 생산성 부침이 심하다.

표 3-7. 농업생산지수 (1999-2001 =100.0)

총농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A(%)
캄보디아	39.2	50.3	66.0	83.1	99.4	103.2	98.8	114.2	105.6	4.1
라오	42.1	50.9	64.4	64.1	104.8	106.4	115.3	110.8	115.3	4.2
베트남	37.0	47.9	58.1	74.9	100.7	104.4	112.4	117.4	124.1	5.0
경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A(%)
캄보디아	44.4	50.9	66.7	85.3	99.1	101.7	96.7	115	105.7	3.6
라오스	43.7	52.8	65.5	59.3	106.1	107.2	117.6	110.6	117.8	4.1
베트남	38.4	47.6	57.4	74.5	101	103.8	111.8	116.1	122.0	4.8
식량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A(%)
캄보디아	42.5	44.0	61.2	83.5	98.8	103.0	95.7	118.0	105.6	3.8
라오스	47.0	62.2	68.3	63.5	99.7	105.4	109.3	108.0	116.3	3.8
베트남	35.9	48.9	59.2	77.4	101.6	100.6	108.3	109.7	114.9	4.8
비식량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A(%)
캄보디아	34.2	69.1	93.1	114.5	107.7	87.0	78.2	111.6	112.5	5.0
라오스	46.4	33.1	92.6	61.4	122.7	99.4	99.2	83.1	101.2	3.2
베트남	12.5	18.0	22.3	42.0	105.2	112.5	106.4	115.5	119.8	7.9
축산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A(%)
캄보디아	17.1	45.4	60.3	78.8	102.6	104.9	102.8	106.7	101.0	7.4
라오스	33.5	42.1	58.4	91.2	96.8	100.9	106.0	113.6	102.9	4.7
베트남	27.2	45.2	56.2	72.0	99.9	106.9	116.2	125.8	132.6	6.6

A: 연평균증가율.

자료: FAO STAT.

경종작물의 생산성 부침의 한 요인은 농경지의 관개수리 비중과 연관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30% 이상의 농경지가 관개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10% 미만과 10%대의 농경지가 관개수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베트남의 경우 농업생산성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농업생산성의 부침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종작물 중에서 비식량작물의 생산성이 부침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식량작물의 특성상 시장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선 부족한 영농기술 및 수확 후 처리기술 시스템을 개선하고 농촌의 교통, 도로,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식량가용성

‘식량가용성(food availability)’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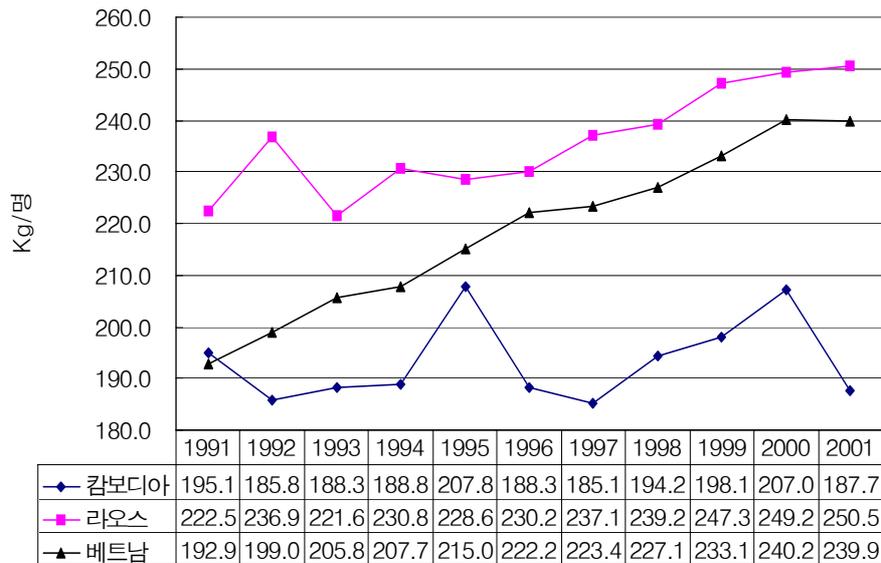
$$FA_t = Q_t + (M_t - X_t) + (S_{t-1} - S_t)$$

여기서 Q_t : t기의 생산량, M_t : t기의 수입량, X_t : t기의 수출량, S_t : t기의 저장량을 나타낸다. ‘일인당 식량가용성’은 당해 연도 생산량에 당해 연도 순수입량을 더하고 당해 연도 저장량의 변화를 더한 후 위 식을 해당 연도의 인구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⁸

저장량 변화는 식량가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저장량 변화가 “부(-)”의 값을 가지면 비록 일인당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일인당 소비가 감

¹⁸ 식량가용성의 정의와 구매력(entitlement)감소에 대해서는 Sen(1981) 참조.

그림 3-7. 일인당 곡물가용량 변화추세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소하여 전년 대비 저장량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entitlement)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식량구매력이 감소하여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가용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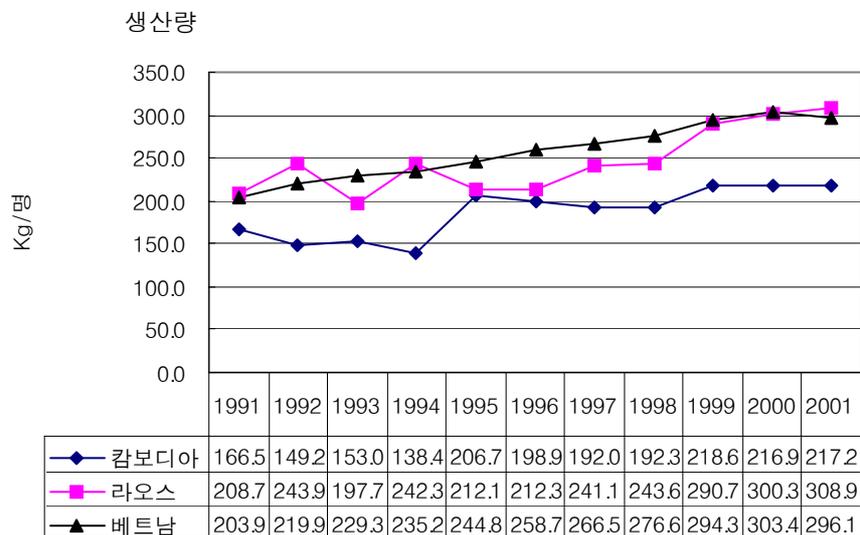
2001년 당시 캄보디아의 연평균 일인당 곡물가용량은 187.7kg, 라오스는 250.5kg, 베트남은 239.9kg를 보이고 있다. 3개국의 축산물 소비량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바 캄보디아의 일인당 식량가용량은 인접한 라오스, 베트남에 비하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경우 1990년대 접어들어 '1인당 곡물가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연평균 증가율은 베트남이 2.4%,

라오스가 1.3%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속적으로 안정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오스는 1990년대 초중반 곡물가용성에서 부침을 보였으나 중반 이후로는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의 경우 ‘일인당 곡물가용량’은 부침을 거듭함으로써 연평균 -0.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1~2001년의 10년 동안 일인당 곡물 생산량은 베트남의 경우 203.9kg에서 296.1kg로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라오스는 3.9%, 캄보디아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일인당 곡물 생산량이 안정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곡물 생산량의 해거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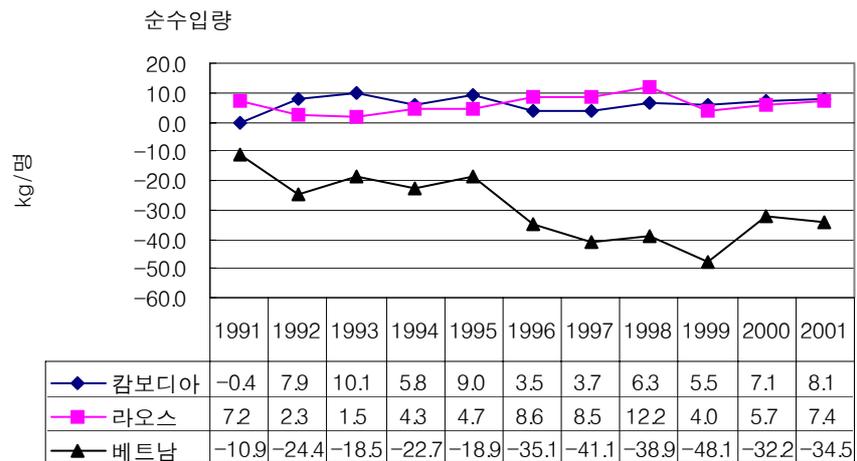
그림 3-8. 일인당 곡물생산량 변화추세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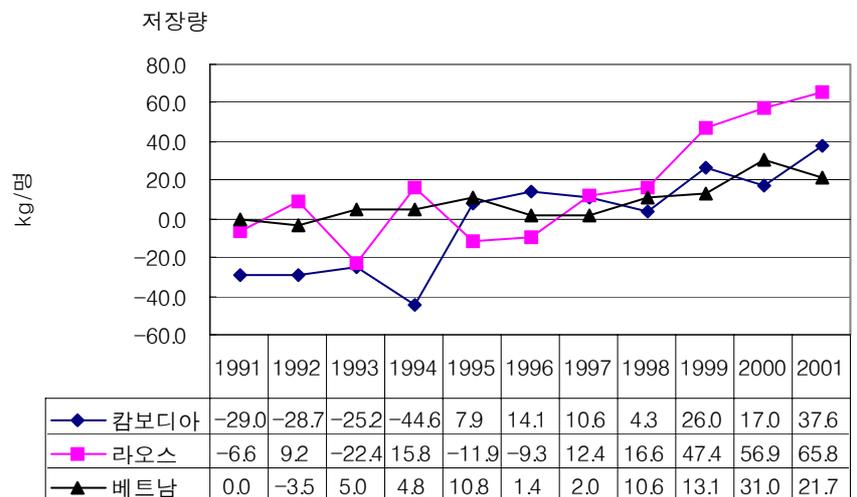
¹⁹ 곡물(cereals)이고 맥주맥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림 3-9. 일인당 곡물순수입량 변화추세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그림 3-10. 일인당 곡물저장량 변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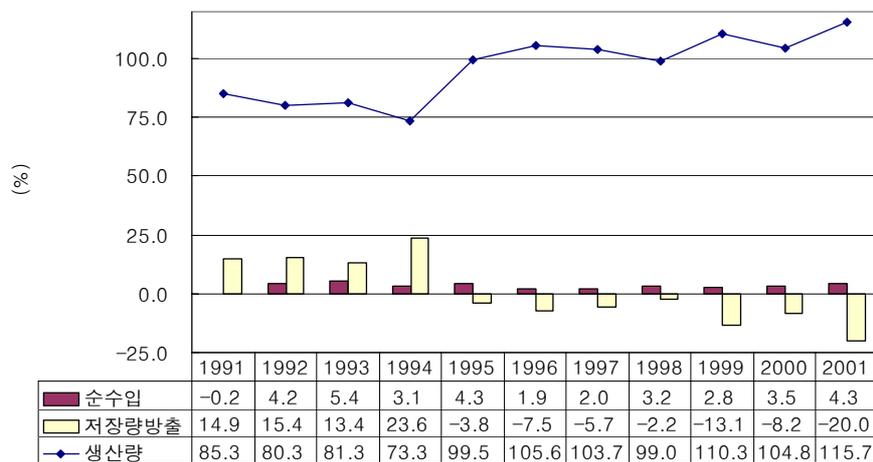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한편 곡물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곡물의 순수출국이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순수입국이다. 베트남은 1990년대 들어 안정된 곡물 순수출을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일인당 곡물 수입량은 1990년대 초반은 극심한 부침을 보였지만 중반 이후는 안정된 추세로 상승하고 있다. 라오스 또한 비교적 안정된 순수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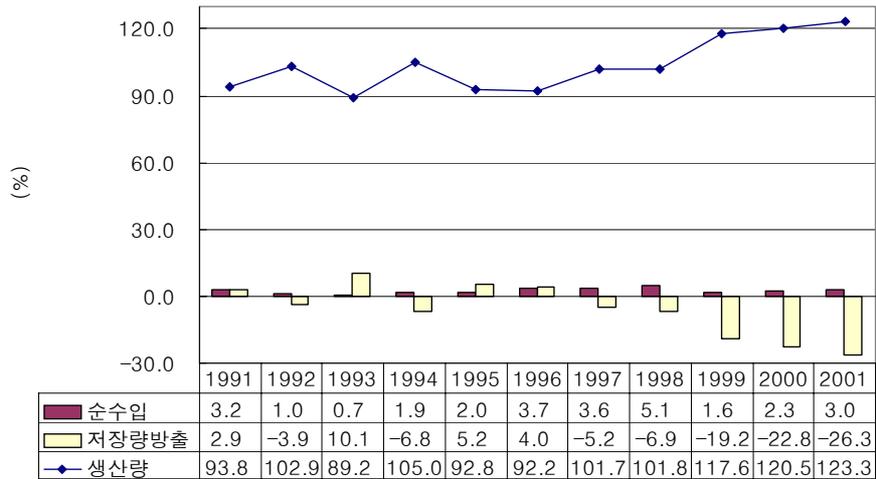
저장량 변화는 시장상황에 따른 결과이다. 비록 생산이 안정되어 있더라도 구매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저장량 증가로 나타난다. 저장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국내 곡물수급 상황에 따라 순수입량이 조절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저장량조절을 통해서 일인당 곡물가용량이 결정된다. 일인당 곡물가용량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량, 순수입량, 그리고 재고량이 일인당 곡물가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해하면 다음 <그림 3-11>, <그림 3-12>, <그림 3-13>과 같다.

그림 3-11.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캄보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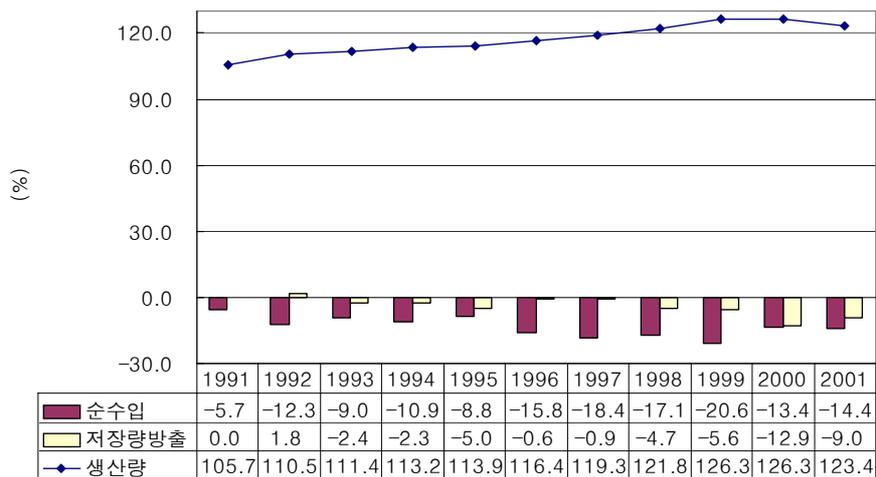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그림 3-12.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라오스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그림 3-13. 일인당 곡물가능량 요인변화 추세: 베트남



자료: FAO STAT에서 가공.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 생산량의 변화가 곡물가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개시설이 수반되지 않은 농지로 인해 생산량 해거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각각 2000년, 2001년) 생산량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식량 공급 가능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도의 생산량 변화는 크지 않으나 저장량이 증가하고, 베트남의 경우 순수출량이 1999년 20.6%에서 2000년 13.4%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인당 곡물가용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구매력 부족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동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베트남이 1.6% 하락, 캄보디아는 0.2% 증가에 그치고 있다<부록 그림 4-3>.

특히, 베트남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곡물 수출이 2000년도에 들어 감소함으로써 농가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소비자 물가는 하락하였으나 재고량의 증가로 일인당 곡물가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미곡수출 부진으로 인한 국민의 곡물구매력 하락에 따른 곡물가용량의 감소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장

농업·농촌 발전전략 및 협력방향

1. 농업·농촌 발전전략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은 빈곤경감(poverty reduction)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생산문제,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농촌개발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생산문제는 기초식량과 관련하여 절대빈곤의 감소와 연계되어 있고,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은 타 지역과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생산물 및 생필품의 시장접근성 제고와 농촌개발로 연계된다.

이들 농업·농촌발전 전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가 수립·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정부, 농촌지역사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또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단편적 투자가 아니라 종합적인 투자개발이 수반되어야 경제주체들의 예상변이(conjectural vari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속적이고 강건(robustness)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음은 각국별로 농촌지역 빈곤경감을 위한 농업 및 농촌개발전략을 제시한다.²⁰

1.1. 캄보디아

1.1.1. 농업분야의 발전 전략

80% 이상의 인구가 농촌지역에서 농업과 자연자원 이용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우 농업생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농업생산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농가 수준의 농업생산성을 높여 가구소득 및 식량 자족성 제고, 자연자원 이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농산물 상품화 등이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전략은 “법제도적 환경 구축”, “소농 및 정부의 관련 정보력 제고”, “농업생산의 집약화·다양화”, “자연자원의 적정 관리”, “지역사회 기반 임업·어업 육성”, “농산물 가공처리 산업 육성”, “농산물 시장 활성화”, “정부 관련 부처의 다차원적 역량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실천 전략으로서는 “역량강화”, “양질의 투입물 확보”, “자연환경 의존성 극복”, “축산업 진흥”,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역량강화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의 식량안보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for Food Security)의 일환으로 역량강화 및 지도 프

²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직면하는 ‘조정실패’와 ‘개발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Big-Push 성장전략과 관련 산업 및 부문간의 전략적 보완 관계 측면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농업·농촌발전전략을 조망한다(부록 3 참조). 농업·농촌개발에 있어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비농업 부문 개발 대비 예산의 효율적 배분문제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선다.

로그그램을 통해 농업생산 관련 주체, 특히 소농의 지식과 숙련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관심 분야는 작부체계, 종자와 비료의 특성, 지역에 적합한 비료 사용법 등이다. 농업생산 관련 주체란 농민조합 등 농촌조직, 정부 관련 부처, 지도 관련 민간조직, 농민 개인 등을 망라하는 것이다.

양질의 투입물 확보는 캄보디아의 경우 경종작물의 종자 문제가 심각하므로 법제도를 정비해 민간부문이 질 좋은 종자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농약이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는 장점을 갖지만, 수입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종합방제 수단(IPM: Integrated Pests Program)을 도입해 화학살충제 등 농약을 덜 사용하는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우기미작농지 200만ha 중 12.4%와 건기 미작농지 26만ha 중 55%만이 관개시설을 갖춘 상태로 한해와 수해에 대한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수자원 관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10ha 규모를 관개할 수 있는 소규모 관개시설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혜 농민이 관리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주민 참여방식의 개발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쌀 중심의 단일 품목 생산체계를 운작 또는 대체작물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대체작물로는 채소 생산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농업다각화 차원에서 축산업 진흥을 위해 농림수산부 내 축산위생국은 마을 축산프로그램(village livestock program)을 운영하고 있고, 가축발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를 위해 국가축산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가축물류 통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축산업 진흥도 캄보디아 농업진흥을 위한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선은 쌀

다음으로 캄보디아의 주식이며, 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0%이다. 농촌지역 인구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50% 내외가 생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한 유지·이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장치를 도입하였으나 생계형 어업종사자와 상업형 어업종사자 간 한정 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문제 해결방식으로 ‘지역사회 참여형 어업 (community fishery)’이 시도될 만하며 이와 동시에 소규모 양식업 진흥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최근 시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사업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다양한 인종 및 문화가 지역마다 흩어져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를 유효한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징을 살린 1지역 1상품 운동을 펼칠만하다. 각 지역의 문화적인 전통과 특산품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지역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1지역 1상품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농촌개발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1.2. 교통과 운송체계의 개선

캄보디아 교통 및 운송의 주무부서는 ‘운송부(MPWT: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인데, 농촌지역의 교통과 운송은 ‘농촌개발부(MRD: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가 담당하고 있다. 도로교통은 여객의 65%와 화물의 70%를 담당하는 중심 교통망이다. 2004년 현재 농촌지역 도로망(비포장 포함)의 총 연장은 28,000km로 추정되는데 포장된 도로망은 고작 11,000km에 불과하다. 10 제곱킬로미터

당 0.5km의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캄보디아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교통과 운송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농촌지역의 낙후된 교통여건은 도로사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와 MRD가 공동 수행한 ‘시엠 리압(Siem Reap)’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는, 도로망 확충이 농촌지역 간, 그리고 농촌과 도시 간 인적·물적 흐름을 급격하게 증진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Kingdom of Cambodia 2002). 이는 아직까지 도로망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도로망 확충 및 개선은 농촌발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전으로 파괴된 농촌지역 도로 재건과 유지관리에 노동집약적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연계하는 전략적 정책 수립이 우선 필요하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의 농업·농촌발전전략은 인간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과 지역간·부문간·개인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광의의 사회자본 형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1.2. 라오스

1.2.1. 농림업 개발 전략

농림업 부문은 라오스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의 80%에 경제적·문화적 기반을 제공하므로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성장부문이다. 그럼에도 비료, 양질의 종자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농림업

부문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근대화 과정에서 라오스의 다 인종적 구성이라는 문화적 특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20년까지 농림업 부문의 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는 “모든 인구의 식량안보 확보”, “연간 4~5%의 성장률 달성”, “상품화 및 수출 농업 육성”, “다양화 및 지속가능 농림업”,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는 지대별로 차별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지대와 고지대는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바, 상대적으로 상업화 경향이 있는 저지대에서는 시장 중심형 농업을, 혁신적 문화가 약한 고지대에서는 정부정책 중심의 농업을 추구하는 것이다.

1999년 라오스 농림부의 농림업 분야 발전 전략에서 7가지가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첫째, 마을이나 지역 단위의 실천이 농업발전에 긴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국지적 소요와 여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참여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시장 중심의 저지대 농업뿐 아니라 마을간·지역간 통합형 물 관리 수요가 상존하는 고지대에 계획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접근성, 기계화 등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저지대 농업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수출농업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상업화 프로그램). 셋째, 경사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및 환경관리의 일환으로서 생물종 보존지역의 보호, 비목재 임산물 수확활동 규제, 다부문적·협력적 토지분배 및 토지관리 등이 주요 목표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이동식 전작의 안정화를 위해 농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가능성에 대한 현장 교육을 함으로써 이동식 전작을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관개면적 확대를 위한 기존 프로젝트 지속 및 신규 프로젝트 도입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인적 자원 개발(HRD)과 관련하여 협력적 계획, 민간 부문의 중요성, 지도기술

등을 강조함으로써 농림부 지역인력의 숙련과 기술을 제고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기업화 환경 조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라오스 농림업 개발 방향을 살펴본다.

1.2.2. 농림업 개발의 우선순위

농림업 개발의 최우선 순위는 47개 최빈곤 지역개발에 있고, 25개 빈곤 지역 개발이 그 다음 순위이다. 개발의 주요 수단은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 실천목표로서는 첫째, 식량안보 및 식량자족성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저영양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 생산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있다. 둘째, 산출물 가치 증식의 일환으로 이미 생산된 산물의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상품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부가가치형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촌지역 공동체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제도, 금융·재정 프로그램, 시장정보 수집과 확산, 농민의 조직화 등을 통해 농업투입물에 대한 공급과 가공산업 육성전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정책 우선순위는 국내외의 시장 지향적 농업, 참여형 농업정책 추진과 함께 인적자원개발, 탈집중화(분권화), 다양화, 기술이전, 지속 가능성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임업은 각각 총 GDP의 7~10%, 비농업 GDP의 15~20%를 차지하고 대외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또 국가 재정 수입의 11%가 임업과 관련된 로열티이고 목재가공산업의 고용규모는 전체 제조업 고용의 25%에 달할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산림의 황폐화가 임업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게 문제이다.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도움을 받아 임업부는 정부 부처 간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자원 관리 효과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목재산업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가공처리 부문의 확장을 꾀하고, 가공처리 부문 확장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산림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감소를 유도한다. 나아가 비목재 임산물 채취 규제 및 묘목 식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토지이용계획 체계 수립 및 불법적 산림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1.2.3. 농림업 부문 주요 프로젝트

현재 라오스 정부 차원에서 농림업 종합계획이 검토 중인데, 양식업 육성 프로젝트, 어란(fish seed) 연구센터의 재건 및 확장 프로젝트, 가축 위생 및 방역 증진 프로젝트, 소규모 금융기반(Micro-Finance) 확충 프로젝트, 농촌 양식업 육성 프로젝트, 도시근교 원예산업 육성 프로젝트, 볏씨 증식 프로젝트, 비목재 임산물의 가공처리산업화 프로젝트, 기초중자 생산 기술 증진 프로젝트, 국가 가축위생센터 증진 프로젝트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농업부문 발전 전략 중에서 라오스에서 유일한 식량자원인 쌀의 증산 및 자급자족 정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쌀의 생산과 벼 품종 육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농업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들 수 있다. 생산기반정비, 농업제도 정비,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발경험 등을 하나로 묶는 종합개발방식의 협력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라오스의 주요 농업정책 목표인 식량자급과 마을 단위의 농촌개발의 효과적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우리의 경우 라오스의 다양한 야생 벼

품종의 유전자군의 확보와 함께 관련 기술 및 인적 자본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농촌개발, 도로개선, 보건 및 인적 자원 개발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3. 베트남

베트남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은 빠르게 진행되는 경제성장과 체제 변화 과정에서 농업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 및 농촌구조의 개선 그리고 농촌지역경제의 다양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요약된다. 베트남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촉진 및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문별 농업·농촌발전전략은 다음과 같다.

1.3.1. 농업·농촌 발전 전략

먼저 농업생산의 효율화 및 다양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시장분석을 통한 비교우위 농업 수출 및 집약농 확장, 쌀 수출의 효율성과 가치 제고, 공업용 작물 및 과채 등 특화상품 생산 지역 개발, 토지법 및 토지이용계획 수정을 지속해 장기적으로 토지이용권을 농민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 등이다.

두 번째, 임업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다수 산간지역 거주민의 소득기반으로 임산물 가공업을 육성하며,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를 지원한다. 또한 토지 및 임야 분배를 통해

산간지 개발정착을 유도하며, 산간지역의 교통접근성과 산물저장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세 번째, 양식업 및 근해 해산물 채취를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이 분야에서의 민간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책적 투자를 적극 고려 중이다. 내륙에서의 제방, 수로 등 건설과 양식업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며, 가까운 미래에 6개의 국립 부화센터와 환경경보센터를 북부, 중부, 메콩강 델타 지역 등에 설치해 120만ha에서 26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 수산물의 다양화 및 새우-쌀 혹은 생선-쌀 혼합생산지역을 육성하며 근해 채취 해산물 가공 산업을 육성한다.

네 번째, 농림어업 및 농촌지역 경제 다양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빈곤퇴치 관련 현장 관료들의 지식 및 접근법 교육, 농촌지역 청년층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기반 확충, 빈곤지역 및 낙후지역에 지도서비스 우선 제공, 지역 실정에 맞는 자조형 빈곤퇴치 모델 개발과 보급, 민관협력 및 민간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다섯 번째, 농업구조 및 농촌경제구조 개혁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쌀, 고무, 커피, 차, 새우 등 농림어업 수출 시장 확대와 생산-가공-유통 연계조직화 및 생산품별 전국조직화 유도, 농촌지역에 대한 기업투자여건 조성,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공공 정책적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농촌지역 내 금융·재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농촌지역 금융체계 개선으로 금융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빈민 은행(Bank for the Poor)’과 ‘인민신용기금(People's Credit Fund)’의 위상과 역할을 재강화해 빈곤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

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낙후지역 내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 정책적 지원 확대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농가 및 민간경제부문을 조직화해 대규모 노동집약적 생산부문의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경제(collective economy)의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생산 주체의 다양화, 민주화, 협력성 등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상습 재난 지역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복구 기금을 중심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자 한다. 북부 지역의 주거·제방 유지보수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강화, 메콩강 유역에 우기 재난 대비 체계 확립, 배수 관련 관개시설 확충으로 생산활동 피해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3.2. 해외 경제 협력

이상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적극유치와 함께, 해외지원국가, NGO, 지역사회전문단체 등 국내외 관련 조직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수상을 중심으로 ‘투자계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가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향후 전략수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체제전환 경제(transitionary economy)’ 중의 하나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후반부터 채택한 국가경제 성장전략 및 발전과정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농업농촌발전 전략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바 있는 전략과 흡사한 점이 많다. 이와 같이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발전 전략, 농촌

공업화 전략,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 채소 및 화훼 개발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남의 지형적 위치와 인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계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과 상호호혜관계는 베트남 일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도차이나 반도로의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농업·농촌개발 사업에 우리의 전략적 참여가 요구된다.

2. 해외협력 방향

2.1. 해외협력사업의 지역 거점화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장기적 경제성장 패턴은 수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¹ 이는 상대적 후발국가인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선발 국가인 베트남의 발전 전략을 따를 경우 베트남과 같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양국이 베트남의 경제성장 및 발전경로를 따를 경우 성장률이 상호 수렴한다는 것은 이들 3개국의 거시경제구조가 유사하고 상호 보완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3개국의 상호 경제협력

²¹ <부록 2> 경제성장 수렴과 추세성장률 참조

관계 유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²²

우리나라는 누적 금액 기준으로 지난 1991~2002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를 베트남에 가장 많이 공여하였고 그 다음이 캄보디아, 라오스 순이다.²³ 특히, 지원초기 물자 중심의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인적 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중심으로 의료·보건, 시장경제 지원, 과학·기술 지원, 농촌개발 등 프로젝트 사업, 전문가 파견사업, 연수생초청 사업으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베트남과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²⁴ 이와 같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한 것은 향후 인도차이나 지역의 경제협력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해외협력개발사업에 투입된 자금이 매몰비용(sunk cost)이 아니라면 향후 협력개발사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협력 및 해외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국과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해외협력에 대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거점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인도차이나 반도국 중 경제발전 후발주자인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성장률이 베트남과 수렴

²² 산업과 교역구조의 투입산출분석을 통한 역내 상호 의존관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권율·정인교·박인원(2003) 참조

²³ 2002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무상원조 수혜국은 금액 기준으로 베트남 1위, 캄보디아 16위, 라오스 21위로 나타나고 있다.

²⁴ 농업부문해외협력방안에 관해서는 정기환·김경덕·김수석·심재만(2005) 참조

한다는 것은 산업구조, 기술협력 등에 전략적 보완 관계가 성립하여 이들 3개국 간의 경제협력이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특히 임가공부문의 진출과 함께 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이 증대되는 등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우리의 ODA 지원 방법은 베

표 4-1. KOICA 무상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1991	22.0	3.7	15.8
1992	0.0	4.8	248.9
1993	24.2	8.6	804.3
1994	6.6	1.2	1,833.1
1995	8.2	51.7	2,592.0
1996	194.5	351.4	2,794.1
1997	1,714.7	785.0	2,531.4
1998	421.6	302.7	4,374.6
1999	352.9	352.9	7,367.0
2000	720.3	710.9	5,517.1
2001	1,364.0	878.7	6,214.2
2002	2,208.3	1,775.5	5,887.9
누적	7,037.5	5,227.1	40,180.4

자료: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2003. 7, 권율(2004) p. 126에서 재인용.

트남을 거점으로 전략적 지원과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용의 최소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수렴하는 소위 상호 전략적 보완 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2. 다양한 협력 사업의 모색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해외협력사업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가 달성한 고도 경제성장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러한 협력사업의 기본 방향은 농업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의 전수에 초점을 맞춘 협력사업은 공급자 위주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원조사업은 우리의 입장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수원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이 되어야 하며 제공된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인도차이나 3개국의 농업·농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프로젝트 선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별로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 하에 주요 과제를 종합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파견 사업과 연수생 초청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별 협력사업 추진 체제로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시혜적인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수

원국의 참여를 통해 수원국의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능력제고(capacity building)를 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에 대한 주인의식(project ownership) 제고와 프로젝트 사업의 효과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베트남에는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 발전 계획 수립 경험을 정책 담당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는 주민의 개발 역량을 높이는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 3개국의 능력개발 중심의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 방식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은 협력사업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조건이다. 3개국 협력 사업 프로젝트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뿐만 아니라 ‘기술적 실천 가능성(technical practicability)’, ‘목표 달성 가능성(object obtainability)’, ‘현실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수원국의 인력 자원 활용 가능성’, ‘수원국의 재원 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3개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농촌 프로젝트 사업의 개발과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가 전문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는 수원국 전문가집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했다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야, 국가 간 비교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기술이나 농업·농촌개발 정책,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 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기술이나 농업·농촌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이다.

먼저 벼씨 육종에 대해서는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도 같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간 고랭지에 적합한 내냉성 벼 품종 육종, 병충해에 강한 내병충성 벼 품종 육종에 대한 수요가 크다. 근본적으로 벼씨를 육종, 생산하고자 하는 것은 쌀의 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식량의 안전한 확보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벼씨 육종이나 증산이라는 단일 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벼씨의 육종에서부터 증산 재배기술, 기계화 작업기술, 기술보급까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3~5년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잠엽기술 지원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이 육잠, 잠견, 제사, 견직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머지않아 중국의 잠엽은 주변 잠엽국인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 후진 잠엽국이 잠견생산, 제사, 견직, 염색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혹은 국별 지원 계획에서 이와 같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잠엽 관련 시설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잠엽 관련 기술지원은 물자 지원보다도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하여 잠엽의 기반을 갖춘 수원국이 잠엽 관련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섯재배 기술 지원 또한 가능하다. 향후 식용버섯은 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버섯으로부터 신물질 추출 등을 통한 약제생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열대지역에 적합한 버섯을 개발 지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버섯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버섯재배기술, 종균생산기술, 버섯 관련 R&D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을 연계한 농촌개발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을 통하여 협동과 자조정신을 함양하고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산기반 정비, 교육, 문화, 보건위생 등 사회개발, 마을회관 건립과 공공시설 등 농촌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운동이므로 새마을운동을 오랫동안 도입하고자 노력해 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는 매우 바람직한 농업·농촌개발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기타 농업협동조합운동 지원 사업, 열대 채소/과수 연구소 지원, 수자원개발 및 생산기반 정비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과 유통사업 지원, R&D 지원 사업 등도 협력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한계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국의 특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를 띠고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자본,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WTO 가입 시도 및 가입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3개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발전 초기에 대두되는 인구 및 산업구조의 1차 산업편중, 농업과 비농업 부문간의 생산성 격차와 이로 인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격차확대, 농촌지역의 절대빈곤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각각 1990년 대 중·초반부터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캄보디아의 경우 제조업의 부침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제조업이 안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라오스는 농업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 접어들어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로, 교통 등의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향후 제조업부문이 라오스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용구조에서는 캄보디아에서 70%대 베트남에서 50%대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20~30%는 서비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75~80%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업·농촌이 인도차이나 반도국의 경제·사회생활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은 비농업 부문에 비하여 1/6~1/3 수준에 불과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유효노동력과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이로 인한 농촌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부족 및 빈곤심화 등은 농촌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1986년 ‘도이 머이’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비농업 부문의 일인당 부가가치가 농업부문의 6.5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다시 도시지역으로 급격한 인구이동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경우와 달리 베트남은 비농업 부문의 GDP 비중이 도시화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측되었는데 이는 경제성장 및 발전의 초기 단계를 거치면서 실현된 경제적 성과가 이촌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도농 간 빈부 격차와 상수도 및 공중 위생접근성 등 사회간접자본 격차는 베트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개발을 통한 안정된 소득원개발과 사회간접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베트남은 향후 도시지역의 주택, 교통, 교육, 범죄 등 도시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생산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와 달리 관개수리 시설,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구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베트남의 농업생산성은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부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인당 식량가용성은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증가하는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부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 패턴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은 역사, 제도,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유사한 경제성장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이 경제협력을 할 경우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은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해 별개의 해외협력정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3개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통합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선발주자인 베트남을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협력의 효율적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농촌지역에 대한 자료의 미흡으로 농촌지역 내 분석 및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농촌지역 단위의 연구와 함께 국가 간 농촌지역 비교연구는 향후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3국의 일관성 있는 시계열 자료 수집 또한 용이하지 않아 엄밀한 비교 정량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례 분석을 통해서 향후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고용인구의 60~80%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시장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제도와 선도적 대외 개방과 개혁정책을 보임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은 부문간·지역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및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 및 제조업의 산업부문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의 불균형 및 격차확대 등에서 유발되는 정치사회적 불안과 상대적 빈곤을 줄이려면 낙후 지역인 농촌을 개발하고 농업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의 농업발전 및 농촌개발 경험의 이전과 상호 협력은 이들 국가의 농업·농촌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사슬고리(chain of technology)’ 측면에서 선진국의 고급기술은 저급기술 보유국인 개발도상국으로 직접 이전되어 운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급기술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전·운용될 수 있다. 기술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기술격차가 심할수록 기술 이전과 도입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수혜국의 기술 유발개발 및 혁신(induced development and innovation)이 발생하기 어렵다.²⁵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쉽게 이전 접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농업 관련 기술 및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의 이전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의 경우 중급기술을, 특히 체화된 기술(embodied technology) 형태로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국과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기술이전,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수출 등의 해외협력사업은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필요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마을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도로 및 교통·운송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를 통한 기간산업 및 간접자본구축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HRD 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관련 전문가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라오스의 주요 식량자원인 쌀 증산 및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벼 품종 육종 관련 R&D 지원, 생산기반 및 농업제도 정비, 농촌정주개발여건 개선 등을 새마을운동 및 농촌종합개발경험과 하나로 묶는 종합개발방식의 협력사업 형태로 구상할 수 있다.

경제구조 및 체제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발전

²⁵ Ruttan (2001)

전략, 농촌공업화 전략,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 농업협동조합운동, 채소 및 화훼 개발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기술사슬고리 측면에서 본다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상호 협력은 수원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목표를 효과적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관련 기술 및 인적 자본의 육성·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도로개선, 보건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국 모두 농업생산기반 취약, 과도한 농업인구와 농촌 낙후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R&D와 HRD, 농업기술과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기술,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조적 농촌종합개발 지원 등 우리나라가 기술사슬고리상에서 이전 및 적용 가능성에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의 역사, 제도, 지리적 인접성 등 사회경제적 보완 관계로 인해 3국의 경제성장 패턴이 수렴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호 전략적 보완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해외협력사업 및 경제협력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베트남이 이들 지역에서 선발주자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경제협력 전략은 베트남을 거점지역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제협력 및 해외농업·농촌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제협력과 상호호혜관계는 베트남 일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차이

나 반도로의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의 유형별 농업·농촌개발 정책 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외 농업협력개발사업의 재구축이 기대된다.

부록 1

인도차이나 반도 삼국의 역사

1.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역사는 ‘고대-앙코르 왕조’, ‘프랑스 통치시대’, ‘시아누크 왕정시대’, ‘크메르공화국시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시대’, ‘캄보디아국시대’, ‘현재의 입헌왕국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고대-앙코르 왕조(~1863)

- 1-6세기경까지 메콩 델타유역을 중심으로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은 후난(Funan) 왕조와 첸라(Chenla)왕조가 존재
- 802년 자야바르만(Javayarman) 2세가 스스로神王으로 칭하고 앙코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삼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크메르 민족의 전성기(고대 크메르왕국 시대)를 구가
- 1431년 삼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까지 삼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

나. 프랑스 통치시대 (1864~1940)

- 1864년 캄보디아는 삼과 베트남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진하여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편입

- 1884년 노로돔(Norodom) 국왕은 프랑스의 강압으로 명목상의 왕위만 유지하고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

다. 시하누크 왕정시대(1941~1970)

- 1941년 프랑스는 당시 19세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를 왕으로 즉위시켰으나, 시하누크는 1945년 일본의 후원하에 독립 선언
- 일본의 패전 후 프랑스가 지배권을 회복하였으나, 1953.11월 시하누크에게 군사, 사법, 외교권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캄보디아 독립 승인

라. 크메르공화국시대(1970~1975)

- 1970.3.28 론놀 장군, 시하누크왕 외유 중 쿠데타 성공, 시하누크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하고 귀국불허
- 1970.4.10 크메르공화국 수립 선포
- 론놀 치하의 크메르공화국은 반정부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탄압함으로써 크메르루즈의 성장 배경을 제공

마. 민주캄푸치아시대(1975~1978)

- 1975.4.17 폴팟이 이끄는 캄푸치아공산당(크메르 루즈) 프놈펜 입성 및 급진혁명 추진

- 1978.12월 베트남군 무력으로 캄보디아 침공

바. 캄푸치아인민공화국시대(1979~1989)

- 1979.1. 친베트남 세력인 행삼린, 체아심, 훈센 등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연합군 프놈펜 입성 캄푸치아인민공화국 수립
- 1989.10. 소련 및 동구권 몰락과 캄보디아 운영의 경제적 부담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따라 베트남군 캄보디아에서 철수

사. 캄보디아국시대(1989.4~1993. 5.)

- 1989.4. 캄보디아 공산당, 국명을 캄보디아국(State of Cambodia), 당명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개칭하고 사유재산 인정, 민영화 추진 등 탈공산주의 추진
- 1990년 UN 안전보장이사회,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 1990.10. 4개 정파간 최고국가평의회(SNC) 구성 합의
- 1991.10.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파리 평화협정 서명, UNTAC(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과 국가최고평의회(SNC)에 18개월 동안 통치권을 위임하고 총선을 통한 신정부 구성 추진
- 1992. 3. 총 45개국 22,000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이 파병되어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아. 입헌군주국시대(현재~)

- 1993년 5월 UNTAC (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 주관 하에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시하누크를 국가수반(국왕)으로 하는 입헌군주국 체제 구성하고 국명을 캄보디아왕국 (Kingdom of Cambodia)로 결정
- 2005년 당시 제3차 총선을 통한 제3기 연립정부 구성

2 라오스

- 8세기경: 라오족, 중국 남부로부터 남하 시작
- 13세기경: 라오스 각지에 무앙(Meuang)이라 불리는 지방호족정치체 성립
- 1353: 최초의 통일왕국인 란상(‘백만마리의 코끼리’라는 의미) 왕국 건설
- 1560: 란상왕국 수도 천도(루앙프라방 → 비엔티엔)
- 18세기 초: 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엔(중부), 참파삭(남부) 등을 중심으로 3개 왕국으로 분열
- 19세기 말: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참파삭 세 왕국이 모두 태국(삼왕국)의 속국으로 전락
- 1893: 프랑스 보호령 시작
- 1941: 일본 군사점령
- 1945: 프랑스가 재점령(일본 패망)

- 1954: 프랑스로부터 독립(1954.7월 국경근처 베트남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가 호치민군에 패배)
- 1954: 독립이후 좌파, 중립파, 우파간 대립 격화
- 1957: 제1차 연립정부(입헌군주제) 수립
 - 1962년 제2차 연립정부, 1974년 제3차 연립정부를 거치면서 친서방 비엔티엔 정부(왕정)와 좌파 라오인민혁명당 (파테트 라오)간의 대립 격화
- 1975.12: 라오인민혁명당, 베트남군의 후원하에 무혈혁명 성공
 - 75.12.2 라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수립 선포
- 1975-98: ‘수파누봉’ 대통령(초대), ‘카이손’ 대통령(제2대), ‘누חק크’ 대통령(제3대)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 유지
- 1998.2~현재: ‘캄타이’ 대통령(임기 4년) 취임(제4대), ‘캄타이’ 대통령(임기 5년) 재선

3. 베트남

베트남의 역사는 ‘고대국가 발생기’, ‘중국복속시대’, ‘전통왕조시대’, ‘프랑스 식민시대’, ‘대미항쟁시대’,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고대국가 발생기(BC 690~111)

- BC 690 베트남 최초의 부족국가인 반랑(Van Lang, 文郎)국이 건국되었으며, BC257 특판(Thuc Phan)이 반랑국을 멸망시키고 어우락

(Au Lac)국을 건국

- BC 207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한 틈을 이용하여 관리였던 쩌에우다(Trieu Da, 趙陀)가 번우(현재 광둥성 광조우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를 영역으로 한 남비엣(Nam Viet, 南越)국 건국

나. 중국복속시대(BC 111~AD 938)

- BC 111 중국 한나라에 의해 남비엣국이 멸망하고 한나라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3개군을 설치하여 식민지배 개시
 -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교육제도, 한자 및 서적, 행정제도, 제방축조술, 토지 개발방법 등을 도입하였고 유교, 도교, 불교 등 고등 종교를 수용하였음.

다. 전통왕조시대(939-1858)

- 응오(Ngo, 吳) 왕조(939-944)
 - 응오꾸옌(Ngo Quyen)은 938년 중국의 남한군을 바익당(Bach Dang)강 전투에서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수도를 꼬로아(Co Loa)에 정하였음.
- 덩(Dinh, 丁) 왕조(965-980)
 - 덩보링(Dinh Bo Linh)은 965년 응오꾸옌 사후 지방을 근거로 할거하는 토착세력간의 치열한 쟁투시기인 12사군 시대를 종식시키고 베트남을 통일

■ 전기 레(Le, 黎) 왕조(980-1009)

- 레호안(Le Hoan)이 980년 침입한 송나라 군을 물리치기 위한 출전에 앞서 딩또안(Dinh Toan)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전기 레(Le) 왕조를 세웠으며 불교문화 번창, 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음.

■ 리(Ly, 李) 왕조(1009-1225)

- 레호안 사망후 리퐁우언(Ly Thai To, 李太祖)이 관리와 승려들의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올라 1010년 교통의 요지인 탕롱(Thang Long, 현 Hanoi)으로 천도하고 통치철학으로 불교장려와 함께 세제 및 지방 행정제도를 개혁하는 등 왕조의 영속을 위해 노력
- 불교보호, 지방행정제도 및 조세제도 정비 등 중앙집권화를 이룩하고, 문묘 건립(1070) 및 과거실시(1075), 국자감 설치(1076),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관개기술을 활용한 수로건설, 광대한 농토개간 등 유교적 농경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시기임

■ 쩌(Tran, 陳) 왕조 (1225-1400)

- 리왕조의 뒤를 이은 쩌왕조는 강력한 정치제도와 군사조직에 힘입어 세 차례 몽골의 침입을 물리쳤으며, 리왕조 시대 못지않게 불교가 융성하였으나 후기에는 불승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후퇴하고 과거제도에 의해 선발된 유교적 소양을 갖춘 문인층에 의해 정치가 주도

■ 호(Ho, 胡) 왕조(1400-1407)와 명의 지배(1407-1428)

- 쩌왕조의 인척으로 실권을 장악한 호꾸리(Ho Quy Ly)는 1400년

왕위를 찬탈하고, 세제를 개혁하고 한전법을 제정하여 왕실과 귀족의 토지소유를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고유 문자인 쯔놈(Chu Nom)을 장려

■ 후기 레(Le, 黎) 왕조 (1428-1788)

- 1427년 레러이(Le Loi)가 응웬짜이(Nguyen Trai) 도움을 받아 명의 군대를 격퇴하고 창건하였으며, 오랜 전란으로 폐쇄된 사회를 재건 하기 위해 행정체제의 확립, 토지제도의 개혁, 학문과 교육의 진흥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발달된 법전인 '여조형률(黎朝刑律)'을 편찬

■ 막(Mac, 莫) 왕조(1527-1592)

- 후기 레(Le)왕조가 수립된 지 약 100년이 흐르자 왕권이 약화되면서 권신이 발호하여 1527년 막당쑹(Mac Dang Dung)이 왕위를 찬탈하였으나, 응웬(Nguyen), 쩡씨(Trinh)에 의한 레(Le) 왕조의 부흥운동이 열매를 맺어 1592년에는 막씨는 까오방(Cao Bang) 지방으로 축출

■ 남·북 분립기(1593-1770) : 쩡(Trinh, 鄭).응웬(Nguyen, 阮)가의 대결

- 막씨가 축출된 다음 일시 베트남이 통일되었으나 북부에서는 쩡씨가 레왕조를 받들고, 중남부에서는 응웬씨가 권력을 잡고 서로 주도권을 다투었으며, 재건된 레왕조의 황제는 부어(Vua)라 불리는 합법적인 지배자로 인정되었지만 실권은 쩌어(Chua)라 불리는 쩡씨와 응웬씨가 장악

■ **떠이 썬(Tay Son, 西山) 왕조(1771-1802)**

- 1771년대 중부지방(Binh Dinh)에서 응웬(Nguyen)씨 3형제가 응웬가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떠이썬(西山, Tay Son) 농민 반란을 일으켜 관리들의 부패와 토지수탈에 분노한 농민들 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받아 쩡씨와 응웬씨를 몰아내고 왕조를 수립함.
- 떠이썬의 막내 응웬반후에 (Nguyen Van Hue)가 북부에서 중국 군대를 물리쳐 쩡(Trinh)가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팡쑹(Quang Trung) 제로 즉위하여 농민들을 위한 개혁정책과 봉건영주제 폐지 등을 시도했으나 팡쑹황제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떠이썬 왕조가 붕괴됨.

■ **응웬(Nguyen, 阮) 왕조 (1802-1859)**

-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떠이썬 반란군으로부터 생명을 보전한 응웬푹아잉(Nguyen Phuc Anh)이 프랑스 용병(300명)의 도움과 의병의 호응을 받아 떠이썬 세력을 격파하고 1802년 마지막 봉건 왕조인 응웬왕조를 수립하고 후에(Hue)에 정도함.
- 응웬왕조는 프랑스 식민지 체제하에서도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Bao Dai)가 퇴위한 1945년까지 존속함.

라. 프랑스령 식민시대(1859-1954)

- 1859: 프랑스군 사이공, 지아딘 및 미토 점령
- 1867: 프랑스 남부 코친 차이나 전 지역 점령
- 1873: 프랑스 북부 톤킨에 무력 진출(홍강을 통한 중국 내륙 진출 목적)
- 1883: 프랑스의 위협에 따라 응웬 왕조와 프랑스 사이에 아르망조약 체결(프랑스의 보호국으로 전락)

- 1893: 프랑스 라오스를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
- 1940. 9: 일본군의 베트남 진주
- 1945. 3: 일본군 프랑스 식민당국을 축출하고 베트남 직접지배
- 1945. 8: 일본군 항복
- 1945. 9. 2: 호치밍 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선언
- 1945. 9: 연합군 베트남 진주
 - 일본국 무장해제를 위해 16도선 이북에는 20만의 장개석군이, 이남에는 영국군이 진주
- 1946. 1: 영국군 프랑스군에게 북위 16도선 이남의 전권을 이양
- 1946. 2: “프랑스-중국협정”에 의거 프랑스군 북위 16도선 이북 관리권 획득
- 1946. 12: 베트민군 하노이에서 일제 봉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대불전쟁) 발발
- 1954. 5~7: 디엔비엔푸 함락 및 제네바협정 조인
 - 북위 17도선을 잠정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할

마. 대미 항쟁시대(1954-1973)

- 1955: 남부베트남에 미국지원 베트남 성립
- 1956. 5: 북베트남 남베트남에 대해서 통일선거 실시협의 제의, 남베트남 이를 거부
- 1960. 1: 북베트남 신헌법 공포
- 1960. 12: 민족해방전선(NLF, 속칭 베트콩) 결성
- 1962. 1: 미국, 사이공에 “남베트남 군사원조사령부” 설치

- 1964. 8: 통킹만사건 발생, 미군기 북베트남 어뢰정기지 공습
- 1965. 2: 미국군 북폭개시, 미국의 전쟁개입
-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 1969. 6: 남베트남해방전선을 주체로 한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성립
- 1973. 1: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 파리에
서 평화 협정에 조인

바. 통일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시대 (1973-현재)

- 1975. 4. 30: 베트남 공산화(사이공 함락)
- 1976. 4. 26: 남북통일 총선거 실시
- 1976. 7.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립
- 1977: UN 가입
- 1978. 10: 캄보디아 침공
- 1979. 2: 중·월 국경전쟁
- 1986: ‘도이머이(Doi Moi:쇄신)’정책 추진결정
- 1989. 9: 캄보디아 철군 완료
- 1991: 중국과 국교정상화
- 1992. 12. 22: 한국과 수교
- 1995. 7. 12: 미국과 수교
- 1995. 7. 15: ASEAN 가입
- 1998: APEC 가입
- 2002: 베트남·미국간 무역 협정 발효

부록 2

경제성장 수렴과 추세성장률

Solow의 경제성장모형은 기술발전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단지 저축률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Solow류 모형의 약점 중의 하나는 경제가 균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더 이상의 추가적 경제성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경제성장을 내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Solow 모형에 입각하면 후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보다 높고 따라서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잡는다는 소위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s)”가 발생하여 후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성장률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경제성장률의 발산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경제성장률의 수렴은 선진국 내, 즉 경제유형이 비슷한 국가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1980년대 중반 Romer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저축률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을 내생적으로 고려하고, 후진국과 비교하여 선진국의 체증적 경제성장 현상을 분석하면서 조건부 수렴을 규명하고 있다. 이에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경제성장률 수렴여부 검증과 추세성장률 추계한다. .

1.1. 경제성장수렴조건

인접국간의 경제성장의 수렴 여부는 상호 간 역내 경제협력구축의

파급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수렴할 경우는 경제의 거시적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 및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ro & Sala-i-Martin, 2004).

수렴조건은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데 초기 연도의 일인당 GDP와 비교년도의 일인당 GDP를 분석 대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나, 이 보고서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유도(degree of freedom)문제 때문에 횡단면 분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3개국의 횡단면과 1971~2003년의 시계열 자료를 혼합하여 분석한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시계열과 횡단면의 혼합(pooling)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alpha_i + \gamma t + \lambda Y_{i,t-1} + \varepsilon_{i,t}^{26}$$

- $Y_{i,t}$: I국의 t기의 1인당 GDP의 자연로그값
- t : 시간변수
- $\lambda = (1 - \beta), \gamma = (1 - \lambda)g$
- 정상상태로의 수렴조건: $\lambda < 1$ ²⁷

여기서 β 는 횡단면 수렴분석 중의 하나인 β 수렴의 계수를 나타내

²⁶ 수렴의 조건을 규명하기 때문에 시계열과 횡단면 자료를 혼합할 때 각국의 경제성장경로가 크게 상이하지 않다고 가정하여 국별 더미변수(dummy variable)을 사용하지 않았다.

²⁷ Islam(1995) 참조

고, g 는 정상상태에서의 추세성장률, 즉 $g = \frac{\gamma}{(1-\lambda)}$ 를 만족한다.²⁸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panel data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표 2-1. 경제성장 수렴조건 검증

λ	γ	Adj-R ²	Pro(F)
0.855341 (17.76205)	0.004447 (1.665775)	0.815022	0.000000

()는 t 값

$\lambda < 1$ 이므로 1971~2003년의 33년간 3개국의 국민소득성장 경로는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국의 경제성장 패턴이 수렴한다는 것은 상대적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는 장기적 자본 투입으로 베트남과 유사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은 역사, 제도,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경제발전 및 성장의 ‘전략적 보완 관계(complementarities)’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

²⁸ $Y_{i,T} = \alpha + \beta Y_{i,0} + \varepsilon_{i,t}$

• $Y_{i,T}$: T기의 I국의 ln(GDP/pop)

• $Y_{i,0}$: 초기의 I국의 ln(GDP/pop)

• $\beta = \lambda^t$ 수렴조건: $\beta < 1$

과 상대적 후발국가인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경우 베트남과 같이 자본 투입 및 제도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s)’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경제성장률이 수렴한다는 것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3개국이 경제협력할 경우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필요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뜻한다.²⁹ 이 경우 한국은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해 각각의 해외협력정책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3개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통합적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베트남이 인도차이나 반도 3개국의 선발주자인 바, 베트남을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경험적 논거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추세 경제성장률

지난 33년(1971~2003)간 1인당 GDP 추세성장률을 추정하면 베트남 6.4%, 라오스 2.4%, 캄보디아 0%로 나타났다.³⁰ 캄보디아의 경우 1인당 GDP 추세성장률이 “부(-)”의 결과를 보이는 것은 추세성장률이 장기변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970~80년대 “킬링필드”시대에 마이너스 성장충격의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베트남과 유사하게 경제성장 전

²⁹ 심승진(2004)은 동아시아 9개국을 중심으로 소득수렴 여부와 지역경제통합 조건을 규명하면서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들내에서는 소득수렴 조건이 성립하나 동아시아 9개국 전체에서는 수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면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³⁰ 최근 실적치와 상이한 것은 장기 추세를 추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락을 추구한다면 베트남의 추세성장률인 연평균 6.36%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표 2-2. 1인당 GDP 추세성장률

	λ	Υ	$\Upsilon/(1-\lambda)$	A-R ²	Pro(F)
캄보디아	0.458869 (2.769723)	-0.005491 (-1.583613)	-0.010	0.434710	0.0001
라오스	0.697314 (5.5507654)	0.007237 (1.402644)	0.0239	0.747237	0.0000
베트남	0.543451 (3.705570)	0.029053 (3.084670)	0.0636	0.843642	0.0000

()는 t 값.

부록 3

조정실패와 저발전문제

최근 1990년대와 21세기 초에 들어 성공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제발전에 필수 조건인 경제주체, 제도, 자본 및 기술 간의 전략적 보완적 관계(complementarities)가 중시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보완적 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의 투자행위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의 보완적 관계가 성립될 경우 개별경제주체의 투자행위는 다른 경제주체의 투자행위에 유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간의 보완적 관계 형성이 여의치 않음으로써 경제성장 및 발전의 성과가 열악하다는 것을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현상으로 설명된다.³¹ 조정실패의 문제는 개별경제주체는 자신의 경제행위를 사회 전체 후생과 일치시킬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후생을 열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경제주체의 행위가 조정될 경우 경제전체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경제주체들은 비록 더 나은 경제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개별경제주체 차원에서 경제주체 및 부문간 조정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개별경제주체의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상이한 예상체계, 나아가 다른 경제주체들의 “선행동(first move)” 자신은 “기다림(follow)”으로 모두가 후행자(follower)로서 행동함으로써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인의

³¹ Hoff & Stiglitz(2001)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놓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보완적 관계는 자신의 투자 수익은 상대방의 투자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개발경제에서 네트워크 현상으로 종종 나타나고 있다.³² 예를 들어 특화된 기술과 이들 기술을 취득한 노동자의 능력을 활용하는 기업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은 자신이 원하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가 부족할 경우 그 지역에 진입하지 않고, 노동자 또한 이들 특화된 기술을 수요 하는 기업이 입주하지 않는 한 이들 특화된 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없다. 따라서 조정실패로 인해 저급 균형에 고착된다.

왜냐하면 고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이 많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기술을 수요 하는 기업이 입주할 것이고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바로 조정의 실패가 발생하고 적절한 정책 없이는 경제성장 및 발전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조정의 실패문제는 산업화 초기에 관찰되는 공통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기술향상 및 신기술도입에도 적용된다. 나아가 조정의 실패는 자본시장을 비롯한 다른 연관 시장의 실패에 의하여 심화된다. 따라서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Big Push' 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³

전략적 보완 관계로 설명되는 개발초기의 투자의 외부효과는 개발초기의 '개발함정(development trap)'에 함몰되지 않고 지속적 성장을

³² 이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경제행위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 "빅푸쉬(big push)"모형과, 일 기업의 기술 및 품질향상은 다른 기업들의 기술 및 품질향상에 관한 유사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데 중점을 두고 설명한 "O-Ring model"을 들 수 있음.

³³ 특히,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a)에서 질 좋은 Nash 균형으로 수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Hoff & Stiglitz 2001 참조)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농업·농촌부문에도 그 설득력을 가진다. 라오스의 경우 상업농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생존수준의 농업에 머물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의 도로, 교통 및 통신기반설의 미비 때문이고, 캄보디아의 관개시설 미비, 베트남의 농산물 유통시장의 미발달 등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을 지니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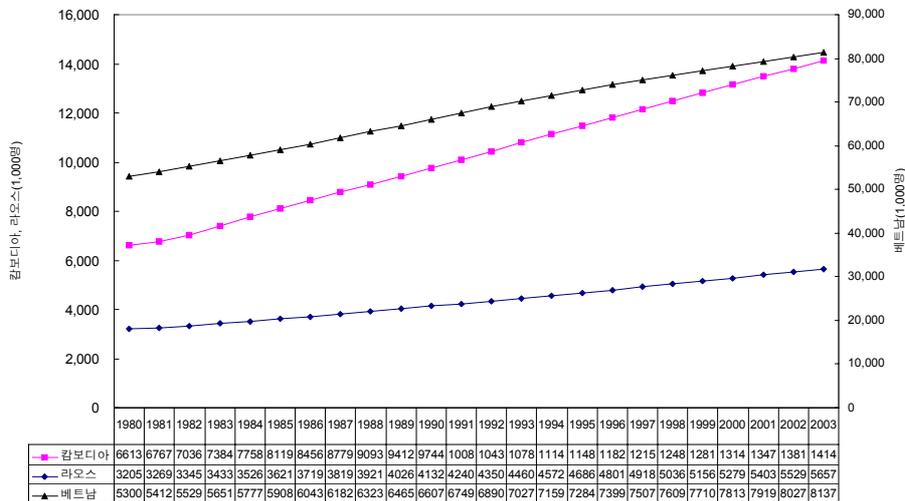
비록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상업영농으로의 전환은 요원하다. 생산의 특화는 고생산성의 주요원인일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산의 특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필수적인데, 이 경우 농산물 품질정보에 대한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ic)’으로 말미암아 거래의 축소 및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비효율적 거래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우회하기 위한 중간유통기구, 즉 중간상인의 농산물 품질에 대한 보증이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중간상인은 농가뿐만 아니라 농가의 생산물에 대해서도 최종소비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상인의 농산물품질보증은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능한 중간상인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단화되고 특화된 농가의 수가 충분하여야 농산물의 품질보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중간상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들 또한 특화하고자 하는 유인은 감소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유통되는 농산물 중심으로 생산할 것이다. 지역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생존수준의 농업에 머물고 마는 발전의 함정에 빠져든다.

부록 4

인구, 소비자물가, 농업생산성 지수

부록 그림 4-1. 3개국 인구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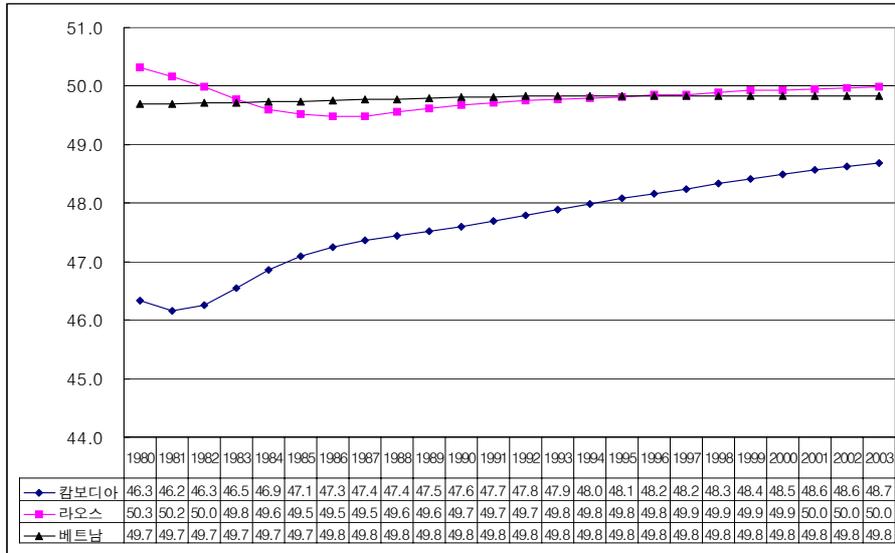


부록 표 4-1. 3개국 인구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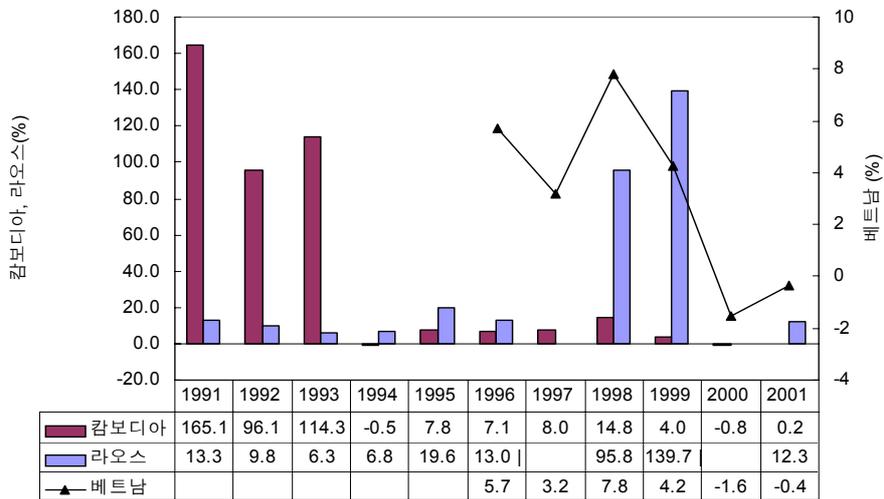
단위: 명/km²

	1986	1990	1995	2000	2003	2004
▶ 캄보디아	43	48	58	69	73	75
◆ 라오스	16	18	20	23	25	25
▲ 베트남	188	203	221	239	246	249

부록 그림 4-2. 남자비중(%)



부록 그림 4-3. 소비자 물가상승률 변화



부록 그림 4-4. 농업생산성지수 변화추세(1999~2001=100)



참 고 문 헌

- 권오복, 최세균, 허주녕. 『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 기초 연구』. KREI, 2004. 12.
- 권율, 김윤경.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분석』. KIEP, 2002.
- 권율, 정인교, 박인원.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KIEP, 2003.
- 권율. 『ASEAN 주요국의 빈곤감축전략 및 ODA 활용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4. 10.
- 김경덕.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91, 2004. 12.
- 『베트남 농업투자 관련 법률 및 제도』 『베트남 농업투자환경 보고서』. 농업기반공사. 2004. 10.
- 김한호. 『한-ASEAN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대학교. 2004. 농업기반공사.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보고서』. 각년도.
- 심승진. “동아시아 국가의 소득수렴과 지역경제통합의 조건.”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3호. pp145~170.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12.
- 정기환, 김경덕, 김수석, 심재만. 『KOICA 해외협력사업 농업·농촌개발 분야 성과 평가』. KREI. 2005. 6월.
- 왕인근. 『아프리카 농업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Aghion, P. and Howitt, P., *Endogenous Growth Theory*, MIT Press, 1999.
- Alston, Lee, J(eds.), *Empirical Studies in Institution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Asian Development Bank, *Rural Poverty in Developing Asia*, ADB, 1994.
- Barro, R.J., and Sala-i-Martin, X, *Economic Growth*, 2nd ed. MIT Press, 2004.

- Birdsall, N. "Economic Approaches to Population Growth,"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 pp477~542, 1988.
- CIEM, *Vietnam's Economy in 2003*,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Hanoi, Vietnam, 2004.
- Cooper, R.W., *Coordination Games: Complementarities and Macro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Government of Cambodia, *Socio-Economic Development Priorities and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Needs*, May 2002.
- Chung, Ki-Hwan, *A Pilot Study on The Rural Saemaul Undong in Vietnam*, KOICA, 2000.
- Gallop, J.L. and J. D. Sachs, "Agriculture, Climate, and Technology: Why Are the Tropic Falling Behind?,"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82. pp731~37. 2000.
- Greenwood, J., Hercowitz, Z., and Knusell, P., "Long-Run Implications of Investment, Specific Technological Chan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3. pp. 342~362, 1997.
- Hoff, K. and Stiglitz, J.E., "Modern Economic Theory and Development," *Frontiers of Development Economics*, eds. by Meier, G.M. and Stiglitz, J.E. pp. 389~458,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Islam, N., "Growth Empirics: A Panel Data Approac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4, pp1127~1170, 1995.
- Kim, Kyeong-Duk, "A Critical Review on the Urbanization and Spatial Development: Inter-Regional Comparison,"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19, No. 1, KREI, 1996.
- _____, "Impacts of Structural Adjustment on Employment, Food Availability, and Poverty: Indian Experienc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0, No. 1, KREI, 1997.
- Kosempel, S. "A Theory of Development and Long Run Growth," *Journal of*

- Development Economics*, Vol. 75, pp. 201~220, 2004.
- Mankiw, N.G., Romer, D., and Weil, D.N.,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2, pp407~437, 1992.
- Meier, G.M., "The Old Generation of Development Economists and the New," *Frontiers of Development Economics*, eds. by Meier, G.M. and Stiglitz, J.E. pp. 13~50,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Minot, N., Baulch, B. and, Epprecht, M. *Poverty and Inequality in Vietnam: Spatial patterns and Geographic Determinants*, IFPRI, 2003.
- North, D.,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Romer, P.M.,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No. 5, pp. 1002~1037, 1986.
- Ruttan, V., *Technology, Growth,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Sen, A. K.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1.
- Todaro, M.P. & S. Smith, *Economic Development*, 8th edition. Addison-Wesley Press, 2003.
-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Vietnam: Advancing Rural Development from Vision to Action*, 1998
- _____, *the World Economy Table*, 각 연도.
- Yoon, Ho-Sup,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ies of Cambodia since the 1990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7, No. 2, pp197~222, KREI, 2004.
-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The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CPRGS)*, November, 2003.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National Growth and Poverty Eradication Strategy(NGPES)*, June, 2004.

Kingdom of Cambodia,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NPRS)*, December, 2002.

ADB, 각 연도. 『국별 통계』.

FAO, 각 연도. 『국별 농업통계』.

< 관련 웹사이트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04. Key Indicators 2004. Web Page:
http://www.adb.org/Documents/Books/Key_Indicators/2004/default.asp

Asian Development Bank(ADB), 2001. Selected Poverty and Related Indicators.
Web Page: <http://www.adb.org/Statistics/Poverty/ctry.asp>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Web Page:
<http://www.fao.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Web Page: <http://www.undp.org/>

World Bank, <http://econ.worldbank.org/wdr/>

김경덕

kdkim@krei.re.kr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FAO 농업통계·정보자문위원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2004)
『과일·과채·채소·축산 수급 및 반응함수』(2002)

심재만

jmshim@krei.re.kr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주요 연구실적 및 저서

『농업부문 사회갈등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2004)
『사회자본 측정지표 개발』(2004)

연구보고 R497

아세안 지역의 농업·농촌 실태와 발전전략

: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중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5. 12.

발 행 2005.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59-611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디자인

전화 02-2273-1775 cree1775@yahoo.co.kr

ISBN 89-89225-91-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